

노동개악 종단하라

관련 기사 3면



사진: 이영준

임박한
노동개악 입법

3면

정경심 구속, 검찰 개혁,
공정성, 입시 개편

4, 5, 6~7면

해외 마르크스주의자
방한강연

마르크스주의
국가론

8~10면

칠레, 홍콩, 카탈루냐,
수단, 레바논 등

빈란에 휩싸인 세계

11, 16면

군산형 일자리

2면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14면

군산형 일자리 — 5년간 단체교섭 유예로 임금 억제하기

민주노총 군산시지부 참여는 부적절

10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옛 한국GM 군산공장에서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이 열렸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5월 폐쇄된 한국GM 군산공장 부지와 새만금산단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2022년까지 일자리 1900여 개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문재인은 이날 축사에서 “광주·밀양·대구·구미·횡성에 이어 또 하나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은 상생과는 거리가 멀다.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임금, 조건 억제가 목표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상생협의회’에서 ‘적정임금’ 구간과 상승률을 결정해 노사에 통보한다. 노사는 이 한도 내에서만 임금 인상을 논의할 수 있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도 도입하기로 했다. 노사 간에 이견이 발생해도 생산 개시 후 5년간은 상생협의회의 ‘조정’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올해 1월에 체결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서 “5년간 임금과 단체협약 유예”를 포함한 것과 마찬가지로 군산형 일자리도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제약해 저임금·저질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하청 공동교섭 보장”도 속 빈 강정일 뿐이다.

게다가 전라북도 등 지자체는 노사가 협약을 어길 경우 지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해 뒀다. 상생은커녕 노동자들이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 “지방정부가 나서서 폐업하고 일자



군산형 일자리는 기업 수익은 '도약'하고 노동자의 임금·노동조건은 '하락'하는 결과를 낼 것

리를 날려버리겠다”(금속노조 성명)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결치레

따라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군산형 일자리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옳다.

정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노사민정 합의의 성과라고 치켜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초에 군산형 일자리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주무부처를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산

업통상자원부로 결정했다. 노사민정 협력은 겉치레에 불과하고 실상은 기업 수익성 보전을 위한 ‘산업정책’이라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최근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한국노총은 애초에 약속된 노동이사제를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노사민정협의회 참여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그 점에서, 노동계의 일부가 이번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두고 ‘노동자 이사회 참관제’를 주요 성과로 내세우는 것도 맞지 않다. 노동이사 한두 명이 이

사회에 참관하는 것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방어하기 어려울뿐더러, 광주형 일자리에서처럼 정부와 사측은 이조차 제대로 지키려 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유감스럽게도 이번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는 민주노총 군산시지부가 참여하고 있다. 민주노총 중앙과 전북지부가 반대했지만, 민주노총 군산시지부는 합의에 참여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군

산시 경제와 일자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본 듯하다.

그러나 군산에서 일자리를 늘려 보자고 저질 일자리 확대에 협력하는 것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앞으로 그곳에서 일하게 될 노동자들은 물론, 지역과 전체 노동자들의 조건을 악화시키는 지렛대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기본권을 5년간이나 제약하는 데 합의한 것은 전반적인 임금·노동조건 하향평준화에 대해 사실상 눈감아 줄 수 있다고 밝힌 셈이다.

사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는 한국GM에 8000억 원을 지원하면서도 군산공장 폐쇄를 지원했다. 이런 돈을 부도기업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는데 쓰거나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었다. 또, 정부는 임금·조건 하락 없는 노동시간 대폭 단축을 추진해 일자리를 늘릴 수도 있다. 그런데 되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빨리 합의하라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군산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대, 최저임금 개악, 탄력근로제 확대 등으로 저임금 일자리 양산을 추진하고, 기업의 수익성을 높여 주려 애쓰고 있다.

이번 전반적인 친기업·반노동 정책에 맞서야만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 확대도 가능할 것이다.

강동훈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 대폭 증가

“비정규직 제로”는커녕 저질 일자리만 늘었다

통계청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규모가 전년 대비 86만 7000명이나 대폭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정규직은 35만 3000명(2.6퍼센트)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저질의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어난 것이다. 역시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약속은 가증스러운 거짓말이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민간 부문 비정규직은 아예 방지했다.

물론, 정부는 이번에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수용해 조사·통계 방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정규직인데도 비정규직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정규직으로 분류된) 기간제 노동자를 추가 반영했다고 해명한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급증은 과장이라

는 얘기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구차한 변명임을 보여 주는 몇 가지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

첫째, ILO가 제시한 기준조차 비정규직 규모를 과소 집계해, 실제 현실보다 비정규직이 적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정부는 8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748만 1000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36.4퍼센트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제대로 집계해 보면 비정규직 규모가 지금보다 작았던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보더라도 비정규직 규모는 이미 820만 명을 넘었고 전체 비중도 40.9퍼센트나 됐다.(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기간제 노동자의 일부가 새롭게 통계에 잡히기는 했지만, 평생 비정규직

인 무기계약직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분류된다. 최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에 따라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곳곳에서 무기계약직·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보다 못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는데, 이런 노동자들의 현실을 통계는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둘째, 무엇보다 (정부 통계만 놓고 봐도) 정부가 통계 기준이 변경돼 추가 반영했다고 하는 35만~50만 명을 제하고도 비정규직 규모는 최소 36만 7000명이나 증가했다. 이는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의 단기 일자리와 보건·사회서비스·교육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기간제 일자리가 대폭 늘어난 것이 이유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

부가 일자리 증가를 자랑했던 바로 그 분야다. 정부는 이를 두고 “고용 개선 효과”라고 치장하지만,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 수준이 낮은 저질 일자리만 늘었다고 봐야 한다.

시간제

시간제 일자리는 1년 사이 무려 44만 7000명이나 늘었다. 문재인은 시간제 일자리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케 하는 여성에게 좋은 일자리라고 말하지만, 나쁜 일자리를 그렇게 포장하는 것뿐이다.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이 낮은 임금, 공짜 노동 강요 등에 맞서 투쟁하는 것만 봐도 시간제 일자리는 노동자들의 바람과 거리가 멀다.

셋째, 이번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6월부터 8월까

지 3개월간 전체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지난해 대비 3.3퍼센트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조사에서 임금 인상률이 5.3퍼센트였던 것보다 하락한 수치다. 임금인상률은 지난 몇 년간 거의 제자리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소폭 상승했는데 올해 들어 다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조사·집계 방식의 변화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정규직의 임금 인상률이 하락하는 동안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률은 십중팔구 더 떨어졌을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것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저소득층을 위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약속도 산산조각 났다.

박설



문재인이 노동개악 바통 이어받으라고 노동자들이 박근혜에 맞서 싸운 게 아니다 7월 16일 노동법 개악 저지 금속노조 결의대회

문재인 정부, 박근혜의 대표 적폐 계승하다 노동개악 중단하라

박설

하반기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10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핵심 키워드는 “경제 혁신”이었다. 이를 위해 기업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은 이틀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대통령에게) 속고 빼앗기고 무너진 잃어버린 2년 반”이었다며 문재인을 맹비난했다. 그러나 2년 반 전에 촛불운동으로 권좌에서 쫓겨난 적폐 원조당과, 구 적폐 세력의 부패·계급 특권·노동개악의 바통을 이어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서로 자기가 “공정”하다고 우기는 꼴은 참기 힘들 만큼 역겹다.

문재인의 시정연설을 자세히 뜯어보면, 그 “공정”이라는 것도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을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감사원 등의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고 경쟁 채용을 지속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정부의 피폐화한 정규직화 정책 이상은 기대하지 말라는 신호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비정규직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까지 나오고 있는데 말이다. (관련 기사 2면)

탄력 붙는 물밀 협상, 더 후퇴한 개악 논의

집권 민주당과 한국당은 여전히 서로 물어뜯으며 쟁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회 연설에서도 이들은 “노동개혁(개악)은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데 공히 일치된 견해를 내놨다. 10월 21일 민주당·한국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노동개악 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기조

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물론, 여야가 예고한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의 통과는 미뤄지는 모양새다. 국회 일정 등으로 봤을 때 11월 초 추진이 유력해 보인다. 즉, 기껏해야 며칠 지연되는 것일 뿐 노동개악에 비상이 걸린 상황은 변함이 없다.

더구나 여야가 날카롭게 대립해 온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12월로 연기됐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우선 처리를 강조해 왔는데, 안건 부의가 예정됐던 10월 29일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 문희상이 한 달 연기를 발표하며 급제동을 걸었다. 여야 간 갈등은 계속되겠지만, 한숨 돌릴 시간이 주어진 만큼 노동개악 합의 처리에 속도를 내려 할 것이다.

실제로 지금 여야 간 물밀 논의가 한창이다. 한국당 소속의 환노위 위원장 김학용은 10월 29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업종에 대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 연장, 신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일시적·돌발적 업무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 기업주들의 요구를 제시하며 “유연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

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이런 요구에 타협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빨간 불이 켜진 노동개악 법안들은 탄력근로제, 최저임금제, 노동관계법 등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해 도로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강요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해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시름을 방치하고, ILO 기본협약 기준을 빌미로 사업장 점거 금지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대항권을 제약하려 한다.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임금, 저항권을 공격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운동의 일각에는 “탄력근로제 입법은 활용 기업이 많지 않아 실질적 영향이 크지 않다”거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어쩔 도리가 없다는 식의 견해도 있다.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노조파괴법의 상임위 상정 시 총파업” 방침을 일찌감치 정했는데, 이는 탄력근로제 확대 등 다른 개악에 대해서는 칼날이 무디다는 점을 보여 준다.

그러나 유노조·대기업 노동자들이라고 탄력근로제 확대가 노리는 조건악화 위험에서 안전한 것은 결코 아니

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무노조·미조직 노동자들은 물론이거니와 협상력이 강한 조직 노동자들도 겨냥하고 있다. 가령, 현대제철 사측은 올해 상반기에 노조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했다. 정부는 이번 개악으로 더 많은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이 탄력근로제를 활용하기를 바란다.

따라서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를 위해 투쟁하길 주저하거나 ‘노조파괴법’ 등 특정 노동개악 입법의 위험만을 부각해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은 실질적 총파업에 나서야

무엇보다 노동운동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정면 도전하길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한일 갈등, 조국 사태 등에서 그랬듯이, 지금 검찰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내세우며 노동운동의 저항을 무마하려 한다. 정치 개혁을 바란다면 한국당에 맞서 민주당을 지지하라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의당을 포함한) 야 4당 공조의 재개가 노리는 바이기도 하다.

그 점에서, 정의당 지도부가 민주당의 공조 제안을 수용하고 나선 것은 부적절하다. 공조하려는 쟁점이 다르지 않다는 것은 형식적인 접근일 뿐이다. 정부·여당이 노동계급 대중의 조건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국회 의석수 확대라는 의회주의적 계산법을 앞세워 적의 숨통을 트여 줘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은 10월 21일 여야 노동개악 합의 이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노동개악 저지 투쟁을 공개 선포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는 ILO 협약 기준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조직하고,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총파

업·총력투쟁을 결의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개악이 코앞인데, 조합원 수가 100만 명이 넘는 힘 있는 노동운동 조직이 내놓은 계획이 고작 서명운동이라니 너무 한가해 보인다. 11월 9일에 가서야 투쟁을 결의하겠다는 것도 안이하다.

국회에서 개악안 통과가 임박해서야 투쟁을 하겠다는 식의 대응이 비효율적이라는 점은 그동안의 경험만 봐도 알 수 있다. 지난해 5월에도 민주노총 집행부는 사회적 대화 성사에 집착하면서 예상되는 ‘최저임금 줬다 빼앗기’ 개악에 맞서 투쟁을 조직하는 데 소홀했다. 그러고는 국회 통과가 임박해서야 2시간 파업을 하는 데 그쳤다. 민주노총은 이 쓸쓸한 패배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즉각 총파업을 선언하고 단호하게 실질적 파업에 나서야 한다. 10만 명을 목표로 하는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도 국회가 쉬는 주말에 여의도에서 할 게 아니라, 광화문을 계속 우파에게 내주지 말고 그곳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10월 29일 정부는 전교조 인정 등을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농성 중인 전교조 교사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냈다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미국GM 파업 평가
- ★ 정의당은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을까?
- ★ 연세대 시간제 청소노동자들의 투쟁 소식
- 등등

빛바랜 촛불 3주년

검찰 개혁에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

김문성

국회의장 문희상은 10월 29일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을 담은 검찰 개혁안을 12월 3일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의 신속 처리 방침 때문에 빠르면 10월 말에도 검찰 개혁안이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하지만 한 달여 뒤로 밀렸다. 자유한국당이 법안을 반대하고 나머지 야당들이 검찰 개혁안만 우선 처리하는 것을 비판하자 여당이 또 밀린 것이다.(한국당은 12월 처리도 빠르다고 못마땅해 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막는 게 목적인지, 검찰을 개혁하는 게 목적인지 헷갈릴 정도로 대의명분 없는 행보를 거듭한 대가다.

11월 국회는 내년 예산과 검찰 개혁, 선거제 개혁을 두고 지루한 공방을 이어갈 듯하다. 검찰 개혁안 처리가 늦춰지면서 선거제 개혁도 함께 본회의에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정작 선거제 개정안 처리 시점이 다가오자, 지역구를 소폭 축소하기로 한 개정안에 민주당 의원들조차 찬성 투표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의당이 선거제 개혁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조국 정국 내내(사실은 그 전부터도) 민주당으로부터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했는데, 본전도 못 찾고 배신당할 경우의 수가 생긴 것이다.(진작에 이런 예측과 경고가 나돌았었다. 노동자연대도 그랬다.)

이제 와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의원정수를 늘려(즉, 현 지역구를 유지하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운동 초반을 이끈 것은 파업 철도 노동자들과 좌파였다 2016년 10월 29일 1차 집회

며) 비례제를 확대하자고 한다. 그러나 국회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워낙 커 두 주류 정당이 협상 품목에 넣을 것 같지는 않다. 국회 불신의 책임이 주로 주류 양당에 있는 만큼 정의당으로서는 억울한 일이지만 말이다.

이런 공방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친기업 지원 의지를 거듭 과시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0월 30일 서울 구로의 기상 빅데이터 기업 케이웨더를 찾아, “데이터 3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법들은 의료 영리화를 위한 규제 완화 법이어서 노동계가 반대해 왔다. 탄력근로제 확대 계약 등 노동개악 법안들도 국회 처리가 임박해 있다.

문재인이 우파 견제를 위해 기업주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우파는 자신감과 사기가 오르고 세력이

강화된다. 우파를 막겠다고 진보·좌파가 문재인 정부를 방어하고 실질적인 대정부 저항을 회피할수록 불행으로 가는 길을 닦는 것이다.

다행인 것은 한국당이 조금만 유리해진다 싶으면 스스로 헛발질을 해 반(反)우파 정서의 반발을 산다는 점이다. 나경원은 조국 사퇴에 기여한 의원들에게 표창장과 상금을 주는 경박스런 행보로 당 안팎에서 반발을 샀다. 그는 또 선거법 패스트트랙 육탄 저지로 수사 대상이 된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했다. 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뒤늦게 황교안이 당내 회의에서 이를 비판했다는 발언이 공개됐다. 그런데 황교안도 사병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은 결로 유명한 육군 대장 출신 박찬주를 영입하려다가 반발을 사자 하루 만에 철회했다.

조국으로 향하는 검찰 수사의 칼끝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구속에 이어, 검찰은 친동생 조권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다음주에 조 전 장관 본인을 소환할 예정이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도 연장될 듯하다.

정경심 교수는 증거 인멸 혐의까지 받는 처지에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구속됐다. 영장 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으며 증거 인멸 우려도 있어서 구속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본인도 불리하게 됐다. 현재 알려진 수준에서는 코링크PE를 통해 차명으로 WFM 주식을 산 일이 핵심 쟁점이다. 사교업 업체이던 WFM이 2차 전지(배터리) 사업에 진출해 공장을 짓겠다고 하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정경심 교수는 그 직전에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차명(다른 이의 이름)으로 대량 매입했다.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이 문제다.

게다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모두 자신들은 사모펀드 투자 내역을 모른다고(“블라인드 펀드”) 했었는데, 이 차명 주식이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



말과 실천이 너무 달랐다

와 버렸다. 검찰은 관련 통화 내용 녹취도 확보했다.

비록 되팔지 않아서 차익 실현이 안 됐더라도 공직자윤리법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이나 뇌물죄(조국의 직위를 보고 일부러 싸게 주식을 제공했다)로 다룰 소지가 있다. 물론 조국·정경심 둘 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서 재판까지 가 봐야 진실이 규명될 것 같다.

웅동학원의 재단 이사로 재직한 조국이 친동생이 학교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할 때 재단 결정에 어떤 역할

(지위)로 관여했느냐도 쟁점이다.

조국 자녀들의 품앗이 인턴 특혜의 위법성은 조국 자신이 연루된 문제인데, 적어도 위증 혐의는 피할 수 없을 듯하다.

조국 일가의 혐의는 사회 상류층이자 정부 실세 고위층으로서 저지른 전형적인 특권 행각이다. 위법 여부를 떠나 불공정과 계급 불평등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을 많은 서민층이 토로한 이유다.

그런데도 검찰과 언론의 모함과 박해라는 식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조국 일가의 위선과 동료 정치인들의 뺑뺑함이 사람들을 열나게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자리인데 말이다.

따라서 노동계의 대표적 단체들인 민주노총, 정의당, 민중당 등이 지지자인 노동자들의 분노를 대변하길 거절하고 문재인 정부 감싸기에 치중하는 것은 심각한 잘못이다.

가령 검찰의 권한 분산이라는 민주당 담론을 옹호하느라 그들은 **민간청계 억압적이고 부패한 체제 수호 기관인 경찰의 수사 권력이 강화되는 검찰 개혁안을 비판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의 개혁에 진보성이 없다는 증거인데도 말이다.

촛불운동의 분화를 인정하고 노동계급의 독립적 목소리를 내야

3년 전인 2016년 10월 29일, 역사적인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운동이 서울 청계광장에서 시작됐다. 이 운동은 박근혜와 그가 이끈 매우 우파적인 정부에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겼다. 이 운동은 최근 중도파와 우파의 거리 동원 경쟁과 달리, 말 그대로 범국민적(반파배 민주주의) 운동이었다.

이 운동에는 노동운동과 좌파, 박근혜 일당에게 실망한 중도보수층, 좌와 우를 모두 싫어하는 중도적 친문 지지층을 비롯해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이 존재했다. 그들을 계급으로 보면, 다수는 노동자·서민들이었다. 그래서 이 운동의 밑바탕에는 (각자가 정치적 대안을 어떻게 전망하느냐와 상관없이) 계급 불평등 현실에 대한 반감이 깔려 있었다.

이것이 민주노총 공공부문(특히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과 좌파(특히 노동자연대)의 동원 호소가 이 운동의 도화선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초기 동원도 조직 노동자들이 주축을 형성했다. 공통의 적인 박근혜를 물러서게 할 만한 세력으로 보였기 때문에 주도권 행사가 가능했다.

따라서 당시 파업 노동자들이 도화선이 된 거대한 정권 퇴진 운동의 등장은 조직 노동자가 선도하면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근거 없는 온건 진보파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보여 줬다.

그러나 운동이 커지면서 당연히 운동 안에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주도권(헤게모니)을 둘러싼 경쟁이 벌어졌다. 노동계 지도자들은 12월 8일경 파업을 접고 민주당에게 주도권을 넘겨 줬다. 그래서 운동이 온건해진 한 사례는 공식적으로 “황교안 권한대행 퇴진”을 걸자는 좌파(특히 노동자연대)

의 요구가 운동의 공식 지도부인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안에서 부결된 것이었다.

운동이 즉각적 요구(박근혜 퇴진)를 달성했지만, (위에 언급된 이유로) 참가자 다수인 노동계급을 계급의식으로 충분히 각성시키고 단결시키지는 못했다. 이를 이용해 문재인 정부가 촛불을 계승했다고 참칭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후 운동은 계급 이해관계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태도에 따라 분화됐다.

이번에 친문 진영이 주도해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걸고 연서초동 촛불 집회가 촛불 계승을 참칭했지만 확장성을 보이지 못하고 패배한 이유이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자유자재로 쓰며 자녀에게 상류층 지위를 물려주는 정치인 일가를 방어하는 집회에 김용균과 이만호(현장 실습 중 사망한 특성화고 학생)와 김태규(안전 시설이 미비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고졸 청년)의 자리가 있을 리 있는가.

촛불 운동의 다수를 이뤘던 서민층 청년들과 그 부모들이 이전 고위층이 된 민주당 개혁파 정치인들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외면한 것은 당연했다. 그래서 노동계 지도자들이 노동운동과 서초동/여의도 촛불을 통합하려는 일부 진보계 지도자들의 포퓰리즘 전략에 호응하는 것은 잘못이다.

과거의 영광에서 배울 것은 당시의 영상을 다시 트는 것이 아니다. 노동계급이 어떻게 사업장과 소속 부문의 울타리를 넘어,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고 이끌 것이냐(헤게모니) 문제다. 그것은 노동계급이 단결해 사회 전체를 개조할 능력을 보여 주는 것이다.

문재인의 정시 확대와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

교육 불평등을 되레 심화시킬 것이다

정원석 전교조 조합원

10월 26일 정부는 조국 사태로 불거진 교육 불공정 문제를 해결한다며 '긴급대책'을 내놔다. '정시 비중 확대', '자사고·외고 2025년 일반고 전환', '고졸 취업 활성화'가 핵심이다. 10월 22일 문재인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면서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 교육에서의 불공정"을 언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문재인은 '대학입시 제도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11월 중으로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은 국회 시정연설 후 3일 만에 직접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서둘러 대책을 내놔다. 조국 사태로

위기에 빠져 11월까지도 기다릴 처지가 못 됐던 모양이다.

조국 사태는 특권층이 누리는 '그들만의 리그'를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문재인이 스스로 인정했듯이 "교육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특권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방안들은 기껏해야 불만 달래기 용일 뿐 근본적인 처방이 전혀 아니다.

지난 3년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적폐 지속, 개혁 공약 파기, 거꾸로 퇴행'이었다. 이번에 발표한 방안도 마찬가지다. 불평등한 교육구조를 해소하기보다는 되레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는 것들이다. 부유층에게 유리한 전형인 정시를 확대하고, 저임금 노동자 양산을 위한 '고졸 취업 활성화'를 교육 공정성 해소 방안이라며 포장했다.

수능도 학생부도 모두 '금수저 전형'

조국 사태는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의 공정성 문제를 사회적 쟁점으로 올렸다.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스펙이 되는 문제가 부각되면서 학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수시를 줄이고 정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부모의 배경에 따라 스펙이 달라지는 학종과 달리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시험을 보기 때문에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수능 성적은 사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사교육의 양과 질은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한다.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수능성적 1~2등급 비율이 뚜렷이 높아진다. 가장 고소득층인 소득 5분위는 자녀의 수능성적 1~2등급 비율이 11퍼센트이지만, 소득 1분위는 2.3퍼센트로 5분의 1밖에 안 된다.(최필선·민인식, '부모의 교육과 소득수준이 세대 간 이동성과 기회불균등에 미치는 영향', 2015년)

정당 정책위원회도 '정시 50퍼센트로 확대'가 실현되면 강남 3구 학생의 서울대 입학생 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놔다.

대선 당시 문재인은 수능 절대평가와 자격고사화를 공약했다. 문제풀이식 입시 경쟁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공론화 과정에서 절대평가 도입은 빠졌고, 엉뚱하게 정시 비중 확대(30퍼센트 이상)로 후퇴해 버렸다. 이제 정시 비중이

40~50퍼센트까지 늘어날 판이다. 정시 확대는 경쟁 교육을 강화해, 문제풀이식 수업, 학업 부담, 사교육비 등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정시가 금수저 전형이라는 이유로 전교조 등은 학생부 중심 전형(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을 대안으로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상대적으로 일반고와 지방소재 학교에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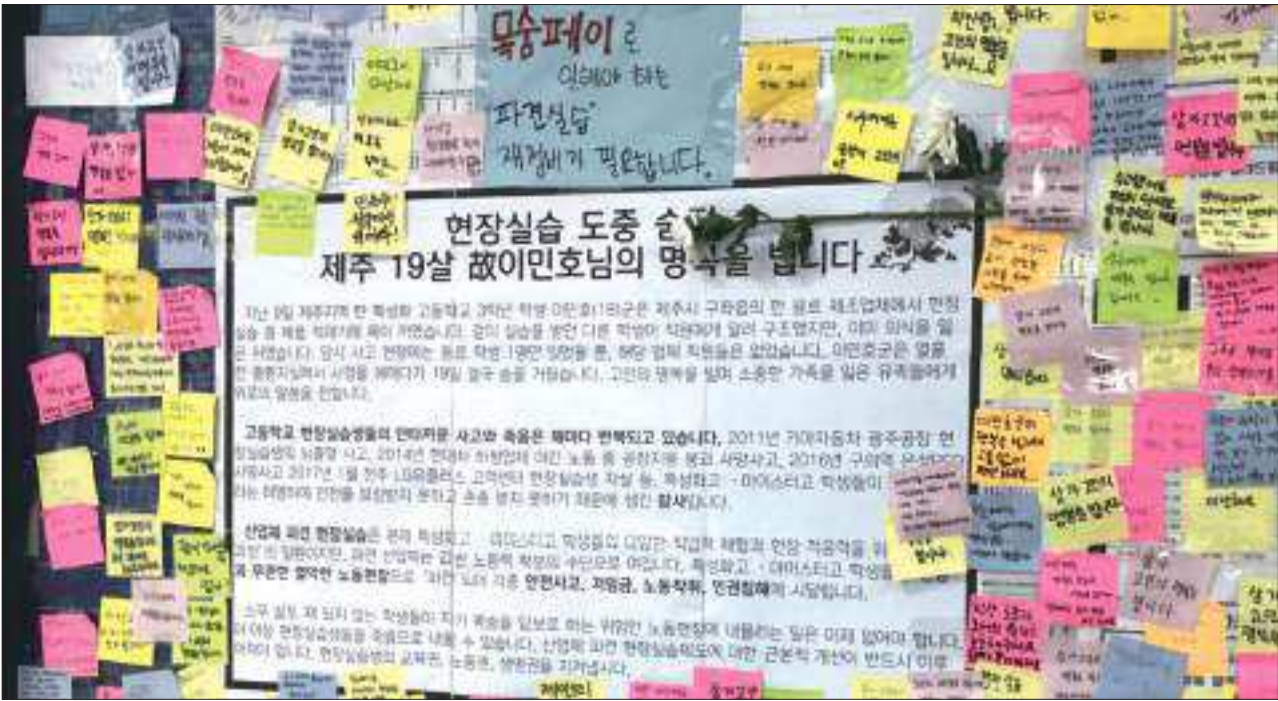
그러나 학생부교과전형(교과전형)이나 학생부종합전형(학종)도 사교육이나 학생의 가정 배경에 좌우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내신 성적도 부모의 경제력에 비례한다. 2018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 성적이 상위일수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이 높았다. 성적 상위 10퍼센트에 속하는 고등학생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38만 4000원이고, 하위 20퍼센트 학생은 21만 1000원이다. 사교육 참여율도 각각 65.8퍼센트와 47.4퍼센트로 큰 격차를 보였다.

학교 교육이 입시 경쟁에 종속되는 한, 수시든 정시든 부유층 자녀들에게 유리하고 노동계급 자녀들에게 불리하기는 마찬가지다. 애초부터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따라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교육 불평등 해소를 바라는 진보·좌파는 '수시냐 정시냐' 하는 패러다임에 갇히지 말고 대학 평준화와 경쟁적(계급 차별적) 입시제도 폐지를 일관되게 요구해야 한다.



수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 수시든 정시든 노동계급 자녀들에게 불리하기는 마찬가지다



현장실습 도중 목숨을 잃은 특성화고 학생 이민호 군을 추모하는 글들 문제인의 '고졸 취업 활성화'는 가난한 집 아이들을 위한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 것이다.

부도가 예정된 어음 — 2025년 고교 서열 체제 완화

영재고-과학교-국제고-외고-자사고-일반고로 서열화된 고교 체제는 대학 서열화의 축소판이다. 1980년대 고교평준화 실시 이후 역대 정부들은 꾸준히 특권 학교를 늘려 왔다.

고교 서열화는 교육과정의 '특성화·다양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등으로 포장했지만, 그 실체는 계급을 대물림하고 경쟁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였다.

2018년 기준 영재·과학교, 외고·국제고, 자사고 등은 모두 112개로 전체 고등학교의 4.7퍼센트다. 그러나 2018년 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 입학생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6.2퍼센트나 된다. 2019학년도 서울대 입학생 기준으로 학교유형별 학생 수 대비 합격자 비율을 따져보면, 일반고(0.4퍼센트)에 비해 영재학교(35.6퍼

센트)는 약 89배, 과학교(8.94퍼센트)는 약 22배, 외고·국제고(4.33퍼센트) 약 11배, 자사고·자공고(1.5퍼센트)는 4배로 엄청난 격차가 존재한다.

특권학교는 공부만 잘 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보다 5~8배 많은 학비를 내야 한다. 전국 단위 자사고는 1인당 학비가 1000만 원이 넘는다. 노동계급의 자녀는 꿈도 꾸기 어려운 '귀족학교'들이다.

그래서 문재인은 대선 때 자사고·외고·국제고의 단계적 일반고 전환과 '고교 서열화 완전 해소'를 공약했다. 그런데 당선 뒤에는 '입시 동시 실시'와 '이중 지원 금지'를 하겠다고 후퇴했다. 결정적으로 올해 전복교육청의 자사고 심사에서 탈락한 전주 상산고를 구제해 준 게 바로 정부다. 고교 서열화 해소는커녕 오히려 특권학교 지키기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에 자사고·외고를 2025년에 일반고로 '일괄 전환'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배신을 전문으로 하는 민주당 정부를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더욱이 다음 정부에서 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믿겠는가. 그나마도 일반고 전환 대상에서 영재고와 과학교를 제외했다. 이들은 입시명문고로 고교 서열체제의 정점에 있다.

또한 입시경쟁의 핵심 원인인 대학 서열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국공립대학네트워크 구축과 공영형 사립대 등 대학서열체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문재인 정부는 대중의 고조된 불만을 의식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는 하지만, 이는 부도날 것이 뻔한 어음이다.

빈곤의 대물림 — 고졸 취업 활성화

정부는 '고졸 취업 활성화'도 교육 공정성 제고를 위한 핵심 방안으로 제시했다. 지배계급은 노동계급 다수가 고등교육을 받는 것은 낭비라고 본다. 서민층 자녀는 대학 가지 말고 저임금 일자리, 생산직 노동자로, 부유층 자녀는 명문대를 나와 고소득 일자리, 전문직·관리직으로, 이것이 지배계급이 바라는 공정성이다.

지배계급은 80퍼센트에 달했던 대학진학률을 큰 골칫거리로 여긴 바 있다. 2012년 삼성경제연구소는 "노동력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 등을 유발하고 "과도한 교육비와 임금 부담"을 증가시켜 GDP 성장률을 1퍼센트가량 잠식한다고 경고했다.(대학에 가지 않아도 성공하는 세상, 2012)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공급을 위해 이명박근혜 정부는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직업계고의 취업률을 올리는 데 열중했다.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은 교육 공정성 제고는커녕 가난한 집 아이들을 저임금 일자리로 내모는 계급 차별적 정책이다. 가난한 집 자녀들이 특성화고로 진학하고, 졸업 후에는 저임금 노동자가 될 확률이 높다. 고졸자의 임금은 대졸자의 67퍼센트에 불과하다. '고졸 취업 활성화'는 빈곤 대물림 정책이다.

10월 25일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의 참석자 구성은 그들의 진정한 관심사가 '교육 불평등 해소'가 아니라 '고졸 취업률 제고'였음을 짐작케 한다. 이 회의에는 교육부 장관 외에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경제·노동 관련 수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졸 취업이 활성화되도록 범부처적으로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보 교육운동진영은 정부의 경쟁 강화 입시정책뿐 아니라 계급 차별적인 직업교육 강화와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에도 반대해야 한다. 교육은 자본주의의 위계화된 분업 구조(노동시장)에 노동력을 분배하는 구실을 한다. 교육에서 경쟁과 차별, 불평등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 부와 특권 대물림 과정에서 입시제도가 일정한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교육 불평등은 근본적으로 계급 불평등에서 비롯한다. 부모의 계급 격차가 자녀의 교육 격차로 나타나는 것이다. 교육 불평등 해소를 바란다면, 입시제도 개선이나 고교 체제 개편에 머무르지 않고 자본주의의 불평등한 계급 구조에 도전해야 한다.

문재인의 공정성으로 불평등이 해소될까?

정선영

조국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공정성을 역설하는 정부·여당 인사들의 위선을 여실히 볼 수 있었다. 친문 인사들은 조국의 법무장관 임명에 분노한 청년들을 비난했다. 하지만 조국과 민주당 인사들에게 많은 청년들이 큰 환멸을 느낀 것은 당연했다. 가난한 집 자녀들은 구의역 김군 또는 김용균 씨처럼 비참하게 죽어간 반면, 조국의 딸은 '부모 찬스'로 쉽게 일류대 진학에 성공했다.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 같은 합법적 제도의 도움을 받으며 말이다.

청년들의 분노가 비록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경쟁의 물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항의하지만, 사실은 이런 계급 불평등에 대한 반감을 품고 있는 것이다.

조국이 사퇴한 이후 문재인은 청년들의 불만을 달래려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강조하고 나섰다. 10월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재인은 "공정성"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사람들의 분노에 물타기를 하고, 그것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고 말이다.

이번 시정연설에서 문재인이 가장 강조한 것은 사실 경제 성장(즉, 이윤 증대)이었다.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도 가능하다는 말은 결국 "혁신" 성장, 즉 신자유주의적 경제 성장을 위해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는 시장주의적 진술인 것이다.

계다가 비열하게도 "공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로 "노조의 고용세습"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언급했다. 조국 문제로 불거진 것은 계급 불평등에 대한 분노였는데, 애먼 노동자들에게 공격의 화살을 돌린 것이다.

한국당과 우파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노조의 '고용세습'이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얼마 전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실제 채용 비리는 없었다.(관련 기사: '감사원 비정규직 채용비리 감사 결과 발표 — '누더기 정규직화' 이상은 꿈꾸지 말라는 경고 <노동자 연대> 300호)

그런데도 정부는 반(反)노동 공조를 위해 우파들에게 타협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처럼 공정성이라는 표어를 이용해 진정한 계급 문제를 가리고 노동계급 내부를 이간질하는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 반복돼 왔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취업준비생 청년들을 이간질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의 배신을 정당화한 것이 대표 사례다.

정규직의 임금을 깎는 정책(직무급제)도 공정성의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 대체 복무안을 후퇴시킨 핑계도 병역 의무의 공정성이었다.

정부는 임용고시 준비생의 불만을 핑계로 학교 비정규 교·강사들의 정규직화를 막았다. 하지만 정작 취준생들의 눈물을 쏟게 만든 것은 정부가 신규 임용 수를 대폭 줄인 일이었다.

이런 '공정한' 이간질이 مه필수록 기업주들만 이롭고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악화될 뿐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는 둘



공정성 운운하며 불평등 심화시키는 문재인 정부

간의 공정성 문제가 전혀 아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은 동반 등락 추세를 그린다.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 상승폭이 제한될수록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의 임금도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그 결과로 기업주들만 이익을 본다.

진정한 분단선은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 사이에 그어져 있다. 공정성 문제 제기의 핵심에 사실은 계급 불평등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하면서 정부의 기만을 폭로해야 한다.

자유주의적 정의론의 한계

조국 사태로 최근 공정성이라는 말이 화두가 됐지만, 공정(과 정의)을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 상당한 견해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이 쟁점을 둘러싸고 역사적으로 상이한 견해들이 충돌해 왔다.

공정성과 정의를 말하는 견해 중 오른쪽에는 시장주의적 정의론이 있다. '개인의 노력은 보상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공적(功績)주의'나, 로버트 노직처럼 개인의 재산권과 시장주의를 절대시하는 자유지상주의적인 경향이 이에 속한다.



김용균 씨의 죽음은 계급 불평등의 현실을 드러냈다 올해 2월 9일 김용균 씨 장례식

1990년대 초 영국 노동당이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며 더욱 우경화하는 과정에서 시장주의적 정의론이 강화됐다. 예를 들어, 나중예(2007년) 영국 총리가 된 노동당의 고든 브라운은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경향이 "공적이 나 노력"을 무시한다고 비난했다.(<평등>, 알렉스 캘리니코스, 울력, 106p)

복지 정책을 후퇴시키는 신자유주의적 공격이 진행될 때 이런 정의 개념이 이용됐다. 복지 혜택을 누리려는 사람들이 '무임승차' 하고 있다며 복지도 일을 해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이른바 '생산적 복지' 또는 '노동연계복지')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근로장려세제가 일과 복지를 연계시킨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복지 정책의 하나이다.(관련 기사: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취약계층 소득보장' 합의 — 기업주들에게 유리한 신자유주의 복지 '개혁', <노동자 연대> 260호)

한국에서 지난 몇 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개인의 노력에 따른 보상'이라는 측면이 강조된 주장을 접할 수 있었다. 가령 교사나 공무원이 되기 위해

수십 대 1, 많게는 수백 대 1의 경쟁을 뚫어야 하는 상황에서 취준생들과 공기업·공무원 정규직 신입사원들 사이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반대 여론이 일었다. 정규 교사가 기간제 교사의 정규교사화를 반대한 핵심 논거도 임용고시 합격 여부였다. 반대자들의 논리는 간단했다. '시험 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나. 시험 준비를 위한 나의 노력은 보상받아야 한다.'

그런데 노력에 따른 보상이라는 정의 개념에는 큰 한계가 있다. 계급사회인 자본주의 사회는 출발선 자체가 불평등하기 때문이다. 시험제도가 그나마 공정한 제도라는 것은 착각이다. 문재인은 정치를 강화해서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대입에서 수능 비율을 높여도 강남과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이 유리하다. 부잣집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공부에 집중하기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사교육 등을 통해 도움도 많이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도를 어떻게 바꿔도 금세 부잣집 자녀들에게 유리하게 된다.

또, 노력에 따른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 하더라도 금세 스스로의 논리에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력은 보상받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문제 말이다.

적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 그 일을 해 온 사람들이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 해서 그 일자리에서 안정적인 조건을 얻을 자격이 없다는 말이 되지 않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차별 속에서도 맡은 일을 책임 있게 해 오며 검증된 사람들이다. 세월호에서 끝까지 아이들을 구하다 안타깝게 죽음을 맞은 담임 교사 중에 기간제 교사도 있었듯이 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우리의 노동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며 울분을 터뜨리는 것은 정당하다.

이처럼 출발선이 다르다는 점과, 보

상할 가치가 있는 노력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 때문에 철학자 존 롤스는 "공적에 대해 보상해 준다는 생각은 실행 불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존 롤스의 정의론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라고 일컬어지는데, 시장 지상주의에 반대하는 개혁주의 진영에서 지지를 받는다. 물론 존 롤스의 정의론도 기본적으로는 개인이 시장에서 자유를 추구할 권리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그는 "차등의 원칙"을 도입해서 부분적으로 개혁적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을 열어 둔다.

차등의 원칙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특이 될 때만 허용된다는 원리이다. 물론 이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만일 사회적 불평등이 경제 성장을 추동해 결국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특이 된다면(일종의 낙수효과가 있다면) 그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 롤스의 주장은 급진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만약 낙수효과가 없다면 그 불평등은 허용돼선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존 롤스의 주장은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 정책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돼 왔다. 이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정책이나, 입학이나 취업에서의 장애인할당제·여성할당제 등을 추진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존 롤스 식의 개념도 현실에서는 잇달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자유주의의 틀 안에서 개혁을 절충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국이 존 롤스의 정의론 지지자였다는 것이 알맞다. 조국의 말이 어떻게 간에 고위 공직자로서의 실전에서 그는 결코 진정한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하는 체제 자본주의는 근본에서 불공정하다

정규직화 공약을 후퇴시킬 때, ‘줬다 뺏기’로 최저임금을 개악할 때, 규제프리존법 같은 ‘민영화’ 정책을 추진할 때, 부동산 폭등을 막기에 턱없이 부족했던 시장 친화적 규제책을 추진할 때 그는 그저 동조했을 뿐이다. 불평등을 개선하고 사람들의 삶을 전진시키려는 진보적 개혁 시도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이윤 논리와 끊임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지금처럼 경제가 침체해 있는 상황에서는 그 시장 편향성이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와 공정성은 결국 양립할 수 없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진정한 정의와 공정성은 자본주의 체제와 양립할 수 없다. 시장주의적이거나 시장주의에 타협하는 정의관으로는 진정한 정의를 구현할 수 없다. 문재인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대].” 그러나 이 중 첫 단추인 기회의 평등조차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실현될 수 없다. 조국과 나경원의 자녀들이 얻은 혜택에서 보듯이 말이다. 이는 우리가 사는 사회가 계급에 따라 조직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공정 경쟁’을 위한 제도를 만들더라도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기회 자체가 불평등하게 분배되기 때문이다.

이 모순이 가장 분명한 영역이 노동시장이다.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마르크스가 지적했듯이 결코 “자유롭고 공정한 교환”이 아니다. 생산수단을 지배하는 사람들(자본가들이나 정부 관료들)이 노동자들을 고용해, 노동자들이 일한 것보다 훨씬 적은 보수를 준다(착취). 이것이 바로 자본가들이 가져가는 이윤의 원천이다. 이런 상황은 노동자에게 생산수단 접근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먹고 살려면 그는 노동력을 팔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본가가 요구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 한다. 그래서 노동자들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가 없다. 개별 사용자를 선택할 수 있지만 사용자 계급 전체를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공정한 노동에 대한 공정한 임금’ 같은 것은 없다고 매우 강조했다.

결국 기회의 불평등이 결과의 불평등을 낳는다. 오늘날 극소수의 수중에 부가 집중되고 빈부격차가 증대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런 생산관계의 불평등을 그대로 둔 채 형식적인 경쟁 절차들을 손본다고 해서 공정성이 구현되지 않는다.

사회가 (불평등한) 계급으로 나뉘어 있으므로 역사와 계급을 초월한 윤리는 없다. 도덕과 윤리는 항상 구체적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공정성과 정의도 누구에게 유리한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본가에게 자유란 노동자를 착취하고 자신의 재산을 불릴 자유를 뜻한다. 하지만 노동자에게 자유는 자기와 자기 피부양자들의 생존을 위해 노동력을 판매할 ‘자유’를 뜻할 뿐이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는 취업한 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죽어가지만 다른 쪽에서는 실업과 해고로 일자리가 없고, 소외가 만연해 자살이 늘어난다. 고시원에서 가난한 청년들과 일용직 노동자들이 죽어가도, 값싼 양질의 공공임대 주택을 찾기 위한 예산보다 민간 임대사업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퍼준다. 누구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수년에서 수십 년 억울한 옥살이를 하지만, 누구는 죄를 지어도 온갖 힘있는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도와 준다(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모든 일들이 누구에게는 ‘정의’이지만 누구에게는 ‘부당함(차별)’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이윤 논리가 존재하는 한 이와 같은 계급 차별과 불평등은 사라질 수 없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 문제를 보지 않고 공정성을 개인 간 관계의 문제로 축소하게 되면 부당성의 진정한 본질을 놓치게 된다.

지배자들은 항상 피차별자들이 근본적인 체제 문제를 보지 못하고, 개인들이 서로

반목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당시 영국에서 이주민이었던 아일랜드 노동자와 영국 노동자들이 반목하는 것을 두고 그것이야말로 “자본가 계급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비밀”이라고 했다. 지배계급은 그런 반목을 의식적으로 부추기며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지배자들에 맞서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은 단결과 투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의이다. 그것만이 모두에게 유리하게 정의로운 결과를 얻어 주는 사회를 낳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투쟁에 바탕해 자본주의 시스템을 제거해야 한다. 착취와 이윤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 따라서 계급이 없어진 사회에서야 진정한 공정성(정의)이 가능할 것이다.

마르크스는 사회주의 사회의 상을 구체적으로 그리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사회주의에서의 핵심적인 분배 원리는 서술한 바 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하는 (사회주의) 사회가 그것이다. 착취가 없고, 민주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되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생산력이 모두의 복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이용될 것이므로, 진정한 평등도 가능할 것이다.

오늘날 조국 사태를 보고 분노하며 공정성을 바라는 청년들의 정서에는 정당한 분노와 바람이 담겨 있다. 아직은 이 청년들이 자본주의라는 게임의 물을 문제 삼기보다는 게임의 룰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항변하는 것이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이 정서는 더 급진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자본주의는 애초에 약속한 물을 지킬 수 없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물론 사이비 진보 세력에게 지금 실망한 청년들이 장차 어떤 정치적 대안으로 향할 것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혁명적 좌파는 자본주의 체제의 수혜자(수호자)들에 맞서 노동계급의 투쟁을 (결국 노동자 혁명으로까지) 전진시키는 방향으로 더 많은 연대와 지지가 모이도록 분투해 가야 할 것이다.

영국, 12월 조기 총선 예정

브렉시트에만 매달리는 정치권에 파열구를 낼 기회

10월 29일 밤(현지 시각) 영국 하원에서 조기 총선안이 찬성 438표, 반대 20표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12월 12일 조기 총선 결정은 이번 주 안에 상원에서 추진될 듯하다.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커〉는 이 총선에서 노동당 대표 제러미 코빈과 노동당을 지지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영국 공식 정치는 지난 2년 동안 끝날 줄 모르는 브렉시트 위기와 의회 내 권력 게임에 빠져 지냈다. 이번 총선은 여기서 벗어날 기회다.

또한 [총리] 보리스 존슨과 보수당 정부를 퇴진시킬 기회이며, 대중의 진정한 변화 염원을 표현할 기회다.

브렉시트는 영국 정치가 150년 만에 맞은 최악의 정치 위기다. 이 위기 속에서 뺏속까지 영국 지배계급 정당인 보수당은 분열할 듯 보일 때도 부지기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브렉시트는 끔찍히도 지루한 주제였다.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고리타분한 의회 운영 절차는 처음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통 이해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이는 정치란 의원들, 보좌관들, 이들을 보도해 주는 언론들 같은 전문가들의 일이라는 생각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노동당이 이런 판에 끼어 경합하려 든 것이 지지율에 전혀 도움이 안 됐던 것도 당연하다.

10월 29일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노동당은 보수당보다 지지율이 평균 10퍼센트포인트 낮다.

옳게도 노동당 활동가들은 선거운동으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17년 조기 총선도 보수당이 던졌던 승부수였음을 떠올려 보라. 당시에도 노동당은 여론조사에서 크게 뒤지고 있었고, 보수당은 낙승을 확신했다.

하지만 오히려 노동당의 약진으로 보수당은 의회 다수당 자리를 잃었다. [이후 보수당은 연립 정부를 꾸려 지금까지 버텨 왔다.] 코빈을 끌어내리려 안달하던 노동당 의원들이 (잠시나마) 코빈 예찬자로 돌변했다.

노동당이 선거에서 참패하리라 예측했던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완전히 틀렸다고 시인해야 했다.

잠재력

총선에는 정치 판도를 바꿀 잠재력이 있다.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이 의회 안에서 무엇에 매달리는지가 더는 초점이 아니게 된다. 대신 정치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중시하는 문제에 관해 말하려 애써야 한다.

마침내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정치에 참여할 — 매우 제한적인 — 기회가 열리고 우리를 지배하는 자들에 관해 말할 기회를 얻게 된다.

2017년 총선에서 노동당이 성공을 거뒀던 것은, 당시 선거운동이 대담한 변화를 내걸고 자신감 있게 진행됐기 때문이었다.

당시 노동당은 그저 보수당 심판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영국 정치를 지배한 인종 · 인종차별 · 전쟁 일체를 끝낼 기회라고 설득하고 나섰다.

노동당이 다가올 총선 선거운동에서 고만고만한 브렉시트 합의안 중 어느 당의 것이 가장 나은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는 재앙일 것이다.

그보다 노동당은 기후 위기를 저지할 분명한 전망을 선거운동에서 더 강조해야 한다.

또 냉동차 집칸에서 [이주민] 서른아홉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종차별을 끝장내야 한다고, 그렌펠타워 참사에서 드러났듯 평범한 사람들의 목숨이 더는 멸시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또한 공공 부문을 지키고,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선거운동이어야 한다.

가장 중요하게로는, 의회 바깥에 있는 노동자 대중과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가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선거운동이어야 한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커) 2678호
번역 김준효



사진 출처: 연합뉴스

찰리 김버 방한 강연

마르크스주의 국가론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이자 공동 사무국장 SWP의 주간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인 **찰리 김버**가 8월 방한해 〈노동자 연대〉 신문 기자들을 상대로 한 강연을 녹취한 것이다. 이날 강연을 통역한 천경록은 전문 통역사이자 노동자연대 활동가다.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편집부가 덧붙인 것이다.

이번 시간에 제가 다룰 주제는 마르크스주의와 국가입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이론적으로 흥미롭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늘날 개혁주의자들과 '기존 국가를 인수해서 노동계급을 이롭게 하고 사회주의 실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논쟁하는 데 있어서 이 주제가 대단히 핵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먼저 강조할 것은 인류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국가가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엥겔스가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에서 이를 매우 강조했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인류는 대부분의 시기 동안 수렵과 채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동물을 사냥하거나 열매를 따 먹으며 살았고 잉여를 생산하지 않았 습니다. 기껏해야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 만큼 수렵과 채집을 했습니다. 그러지 못해 죽을 때도 많았지만 살아남은 경우에도 생존에 필요한 만큼만 수렵과 채집을 할 수 있었습니 다.

이번 사장이 변한 것은 바로 인류가 자신의 삶의 조건을 바꾼 결과였고, 마르크스주의자에게는 전혀 놀랍지 않은 일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논란거리지만 적어도 1만 2000년 전부터는 메소포타미아 강 유역, 그러니까 오늘날 중동 지역에서 농경이 시작됐고 본격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런 과정은 9000~1만 년 전 오늘날 중국에서도 시작됐고 유럽도 이를 따라잡습니 다.

이게 특별한 이유는 그 결과 잉여가 생산됐기 때문입니다. 단지 내일 먹을 만큼이 아니라 소량잉여인정 생존에 필요한 것 이상의 잉여가 생겼습니 다. 이러면서 잉여 생산물을 누가 관리

하고 그것을 어디에 쓸지를 누가 결정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다른 집단이 생산한 잉여를 빼앗을 순 없는지 하는 문제로 생깁니다.

잉여가 없다면 전쟁은 무의미합니다. 전쟁에서 다른 부족을 정복해도 뭣하길 잉여가 없으니 말이지요. 피정복민을 노예로 삼아도 노예는 자신이 먹고 살 만큼밖에 생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할 동기가 없는 겁니다.

일단 잉여가 생기면 계급이 출현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잉여를 지배하고 소유하고, 그것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특정한 집단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열매를 따거나 동물을 쫓아다니지 않고 잉여만으로 생계를 해결하는 집단이 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잉여가 생기면 사유재산 문제가 중요해집니다. 제가 잉여를 소유한다고 해 보죠. 잉여를 물려주려면 누가 내 자식인지가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여성의 구실과 국가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잉여를 누가 지키느냐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그리고 잉여 생산물을 소유·통제하면서 등장한 지배계급은 잉여 생산물을 탈취하는 외부의 적뿐 아니라 내부의 적들한테서도 잉여를 지켜야 했다고 엥겔스는 주장했습니다.

생산력 발달 수준이 낮은 탓에 가능한 것들이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사회주의를 제기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 넉넉한 생활 수준을 누릴 만큼 잉여가 충분치 않았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유재산의 발달과 지배계급·피지배계급의 분화는 인류가 전진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국가: 강압적 계급 지배의 수단

바로 이 대목에서 국가가 등장합니다. 국가는 지배계급이 나머지 인구를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국가에 대해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 살펴보기 전에 지금까지 한 설명을 헤겔의 국가관과 대조해 보겠습니다. 헤겔은 마르크스의 사상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지만, 마르크스가 더 엄밀한 역사적 유물론 분석을 발전시키기 위해 뛰어넘어야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헤겔은 국가를 사회 발전의 역사의 일부이자 그 결과로 설명하지 않고, 사회 발전과는 별개로 외부에서 도입된 것으로 설명합니다.

헤겔에 따르면 사회 안에는 개인들이 원자화하는 경향이 있고 그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에게 모종의 보편적인 이해관계를 부과할 외부 인자가 필요합니다.

즉 헤겔에게 국가는 계급 갈등이나 계급투쟁의 산물이지는커녕 개인들 간의 차이를 완화하고 국익을 관철하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헤겔은 국가의 관료 기구를 보편적 계급으로 규정했습니다. 관료들을 이해관계가 다른 계급들 간의 충돌에서 차이를 제거하는 사람들로 봤습니 다.

실제로 헤겔은 국가를 이성(의지)의 화신이자 실현체라고 말합니다. 제각기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는 이질적 집단들 사이에서 그런 차이를 초월해 사람들을 전진시키는 구실을 국가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정반대로 주장했습니다. 국가는 이성의 화신이지는커녕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착



사진 출처: 연합뉴스

취하는 도구라고 말이지요. 국가가 여러 계급을 초월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특정 계급의 지배 도구라고 봤 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산당 선언〉에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 다. “현대 국가 권력은 자본가계급 전체의 공동 사안을 관장하는 위원회일 뿐이다.” 매우 훌륭한 문장이지만 이 정의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본가계급 전체”가 뭘 가리키는 것일까요? 전 세계 자본가들 다 가리킬 리는 없는데 자본가들이 국가 별로 나뉘어 치열하게 갈등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더욱이 한 민족 국가 안에서조차 자본가 계급 구성원들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합니 다. 따라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정의는 매우 훌륭하지만 우리는 이런 물음을 철저히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정의가 훌륭한 것은 자본가계급이 사회의 다른 계급들, 다른 영토의 자본가 집단에 맞서기 위해 스스로 조직화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국가란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거지요.

[초기 저작인] 《독일 이데올로기》를 쓸 당시에도 이미 마르크스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현대의 사적 소유 체계는 대외적으로는 민족성으로써, 대내적으로는 국가로 조직화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국가는 무엇으로 구성돼 있을까요? 가장 중심부에는 레닌이 “무정한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표현한 억압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요소들을 다 제하고 적나라하게 보면 국가의 본질은 합법적 폭력의 독점입니다. 이 사회에서 폭력을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조직은 국가뿐입니다. 국가를 중심으로 모인 경찰, 군대 같은 특수 집단을 다 가리킬 리는 없는데 자본가들이 국가를 별도로 나뉘어 치열하게 갈등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더욱이 한 민족 국가 안에서조차 자본가 계급 구성원들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따라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정의는 매우 훌륭하지만 우리는 이런 물음을 철저히 파고들어야 합니다.

마르크스는 이 점이 자본주의 초기에 굉장히 중요했다고 지적합니다. 빈분을 땅에서 강제로 몰아내고, 식민지를 세우고, 노예제를 도입하려면 현장에서 국가가 특별한 사람의 생활과 무관한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산업화를 하려면 농민에게서 토지나 공유지를 빼앗아야 했습니다. 농민들은 이를 반기지 않았죠. 그러면 누가 농민들에게 가서 나가라고 했을까요? 무기를 든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위협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계급사회에서는 계급 갈등이 불가피하기에 계급이 조화를 이룬 계급사회는 결코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본가들에게는 계급사회를 유지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국가는 중요한 문제였기에 레닌은 1917년에 〈국가와 혁명〉을 써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 다. 1917년이면 러시아 혁명이 한창인 때라 꽤 바빴을 텐데 말이지요. 〈국가와 혁명〉은 국가 문제에 관한 최고의 마르크스주의 저작입니다.

여기서 레닌은 아름다우리만치 간결하고 명료하게 “국가는 화해불가능한 계급 적대의 산물들이 표현이자 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1871년 파리 코뮌 당시 나폴레옹 동상을 쓰러뜨린 시민과 노동자들

권력 장악과 국가 문제

물론 국가에 대한 혼란 설명은 이와 많이 다릅니다. 오히려 국가는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제시됩니다. 국가 안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하고 국민으로서 보편적 권리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영국인이다. 한국인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그런데 국민적 동질성의 이면에는 당연히도 국민이 아닌 사람(영국인이 아닌 사람, 한국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배제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매우 생생한 문제입니다. 난민, 외국인, 이주민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기에 수장되는 사람들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국민에 포함될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같은 한국인이나 영국인이라는 주장은 허무맹랑합니다.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 까? 부자와 평범한 사람의 생활과 이해관계는 하늘과 땅 차이고, 우리 같은 사 람들은 사회 최상층보다는 다른 국적의

비슷한 사람들과 공통점이 더 많습니다. “한 국가의 국민은 완전히 보편적인 무언가를 공유한다”는 환상은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쉽게 꿰뚫어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강력한 두 번째 환상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은 국가가 특정 집단을 편애하지, 하지만 국가 최상층부에 다른 사람을 앉힐 수 있잖아? 그들이 다른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을 거야.”

이 둘째 환상에 우리는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이것이 좌우를 막론한 모든 개혁주의 세력의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선거를 통해 국가 기구 운영권을 장악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여기고, 이를 성공하기만 하면 사회를 훨씬 더 평등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국가에 대한 이론을 그저 사유해서가 아니라 노동계급의 실제 경험, 특히 파리 코뮌을 보면서 발전시켰습니다.

파리 코뮌은 단명한 실험이었지만 노동계급이 사회의 권력을 장악했고 그 노동자들은 기존의 국가를 인수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형태의 국가를 만들어 했고 그 국가가 특정 집단을 편애하지, 하지만 국가 최상층부에 다른 사람을 앉힐 수 있잖아? 그들이 다른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을 거야.”

이 둘째 환상에 우리는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이것이 좌우를 막론한 모든 개혁주의 세력의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선거를 통해 국가 기구 운영권을 장악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여기고, 이를 성공하기만 하면 사회를 훨씬 더 평등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파리 코뮌에서 노동자들은 전혀 다른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선출된 자가 유권자에게 책임을 졌고, 언제든 소환될 수 있었으며, 모든 사람이 일반 노동자만큼 임금을 받았고 투표권을 누렸 습니 다. 이런 파리 코뮌을 보고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국가론을 새롭게 발전시켰 습니 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이것입니다. “노동계급은 단순히 기존의 국가 조직을 장악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기존의 국가를 분쇄해야만 만들 멀리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진전이었습니 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기존 주장과 연속선상에 있던 하지만, 권력을 장악하려는 노동계급에게 어떤 과정이 있는지 를 명확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달랐 습니 다. 선거로 의회에서 다수가 된다면 장관·총리가 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국가 구조 전반은 변화가 아니라 변혁을 막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국가가 필요하다고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주장했습니다.

그럼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주장이 옳았을까요? 이 주장을 반박하려면 노동계급이 기존 국가를 그대로 장악해 근본적인 사회 변혁을 도입하는 데 이용한 사례를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시도들은 언제나 자본주의 사회의 작동

방식을 상대적으로 작은 변화를 주는 데에 그쳤고, 자본주의 자체를 뛰어넘을 만큼 멀리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선출된 세력이 조금이라도 선을 넘으려는 순간 민주주의에 가려진 국가의 본색, 폭력, 압력이 아주 많 습니 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수단 항쟁에 대한 국가 폭력이나, 1973년 칠레 사태를 이 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들은 꼭 폭력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본가가 투자를 철회하거나 은행들이 압력을 넣거나, 국제 시장에 압력을 넣어 정부의 돈을 막기만 해도 됩니다.

지배계급은 영국 노동당이나 프랑스 사회당 당원들을 굳이 총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야 할 만큼 그들이 자본주의 사회를 위협한 적이 없거나 다른 수단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대한 외관 뒤에서 국가는 언제나 다른 수단을 동원할 태세가 돼 있습니다.

이런 개혁을 선사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 영국 NHS도 이 두 요인이 모두 작용했습니다. 한편에는 변혁을 요구하기 위한 조처였습니 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력을 어느 정도 보존·재생산하고 질병에서 보호하는 것이 자본주의 전체에 득이 됐습니 다.

근데 이것은 노동계급 투쟁이 가려왔 으면 국가가 앞서 도입한 개혁을 도로 빼앗아 간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세계 도처에서 벌어집니다. 노동계급이 패배한 후 대대적으로 민영화나 이뤄져 국가에 속했던 부문들이 도로 민간 기업으로 넘어간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사회적 보조, 복지 서비스, 연금도 계속 후퇴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뭔가 대단히 잘못했다는 정서

▶9면에서 이어짐

이상의 논의에서 국가는 자본주의를 방어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구이고 사회 진보의 장애물이며 그 안에서 뭔가 개혁을 이끌어 낼 여지는 굉장히 협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국가 기관 다수는 어떤 의미에서도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경찰, 법원, 정보기관, 스파이 등에 대해서 우리는 유의미한 통제력이 없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 생산물은 어떻게 분배할지가 투표에 부쳐지지 않습니다. 아예 민주주의의 영역에서 배제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분쇄한다는 우리의 목표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폐지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폐지가 그 국가의 바탕을 이룰 것입니다. 즉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생산, 정치적·사회적 사안들에 관해 결정권을 갖는 더 광범한 형태의 민주주의를 도입해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저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국가”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만 존재할 테지만 그래도 여전히 국가일 것입니다. 다수 즉, 노동계급의 지

지를 등에 업은 그 국가는 옛 착취자들이 착취와 지배를 복원하려는 시도를 차단할 것입니다(그런 시도는 필연적으로 벌어집니다).

우리와 아나키스트의 핵심적 차이 중 하나는 혁명이 성공한 바로 다음날 국가를 폐지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구 질서에 맞서 자신을 방어해야 하고, 상대방의 방해에 맞서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밀어붙이려면 국가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는 러시아혁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혁명 직후에 국내외 적들이 혁명을 피바다에 빠뜨리려 얼마나 애썼던가요. 고도로 조직된 노동자 국가가 없었다면 러시아혁명은 몇 개월 만에 분쇄됐을 것입니다.

그런 강압 기구가 인류 역사 내내 필요할 거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마르크스가 썼고 레닌이 재차 강조한 대로, 시간이 흘러 옛 착취 계급이 모두 파괴되면 국가는 더 이상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 결과 “국가는 사멸할 것”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국가는 강압적 수단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국가를 공산주의 사회의 구현으로 보는 스탈린주의자들과 견해를 달리 합니다. 마르크스와 레닌은 미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연합”이 국가를 대신할 것이고, 사람들을 강압 기구 아래 둘 이유가 없는 만큼 국가는 사멸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어떤 사람들은 레닌의 《국가와 혁명》을 상당히 아나키스트적인 저작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억압적 성격을 인식하고, 계속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가 필요없는 사회야말로 우리의 이상임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알 수 없습니다. 미래에 기대할 흥미로운 실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국가에 대한 관점은 우리 정치의 핵심입니다. 아나키스트, 더 중요하게는 개혁주의자와 논쟁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스탈린주의자와 논쟁하는 데서도 그렇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에서 이런 관점을 언제나 명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김민우 작

국가 폭력은 예외적 일탈일까 존재의 이유일까?

질의 응답

가끔씩 국가 기구 내에서도 불일치, 예컨대 법원은 이런 입장인데 행정부는 저런 입장이라거나 행정부 내에서도 부서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자본가계급 안에 서로 경쟁하는 분파들이 존재하고 그런 것의 영향을 관료들도 받기 때문에 불일치하는 게 있는 것으로 봐야 할까요?

흥미로운 문제입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국가 기관들의 갈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 기구 안에 각 집단이 나름의 이해관계를 발전시켜 배타적으로 이를 지키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이 꼭 자본의 상이한 형태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법관들은 자신들이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법관이 다른 관료나 집단의 압력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계급사회에서 하는 구실을 언제나 의식하지는 않습니다. 법관은 법관들의 이해관계를 더 직접적으로 의식할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당연히 체제를 지지하지만 동시에 나름의 이해관계를 지키려 하는 강력한 집단들 사이에서 충돌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다른 부문의 자본가들 사이에 더 심대한 분열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한 예로 1840년대 영국에서 어떤 부문의 자본은 곡물 가격을 높게 유지하길 원했고, 다른 부문은 낮추길 원했습니다. 그 세세한 이유를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지만 그 때문에 의회, 집권당, 국가 기구 내에 심대한 분열이 나타났습니다.

또 오늘날 트럼프를 둘러싸고 미국 자본들이 부문 별로 첨예하게 분열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트럼프를 완전히 골치거리로 여

깁니다. 예컨대 군부의 일부는 골치거리 트럼프 대신, 다음 행보를 좀더 예측하기 쉬운 인물이 대통령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들 내부에 복잡한 분열이 있을지라도 우리 계급에 맞서서는 신속하게 단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혁명가들이 사회 최상부 분파들 간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해야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맞설 때는 몹시 신속하게 단결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故) 크리스 하먼이 여러 해 전에 자본주의 국가에 대해 쓴 논문을 보면, 자본과 국가의 불일치 같은 것이 존재하긴 하지만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고 기본적으로 자본과 국가는 동행한다고 봐야 한다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에서는 자본과 국가의 불일치가 꽤나 지속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례적 현상이 영국에서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봐야 할까요? 앞으로의 시기에는 좀 자주 일어나는 일일까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놓고 국가와 자본이 첨예하고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분명 혼란스러운 일이고, 그만큼 크게 충돌한 경우를 찾으려면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를 둘러싼 미국 지배자들 내의 근심도 비슷한 정도로 심각합니다.

브렉시트의 경우에는 자본가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흥미롭습니다. 자본가들은 애초 브렉시트 투표 자체를 원치 않았고 지금은 최악의 결과, 즉 10월 31일에 노딜 브렉시트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또 분개하고 있습니다. 제 예상에 자본가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타결되도록 압력을 계속 키울 것입니다. 그런 일은 이미 벌어지고 있죠.

영국의 파운드화 가치가 지난 2년 사이에 추락했죠. 이런 방식으로 압력을 가하는 일은 보통 좌파 정부를 상대로 휘두르는 무기인데 지금은 그걸 보수당 정부에게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자본가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자본은 특정한 결과를 얻고자 하지만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10월 31일에 영국이 실제로 유럽연합을 탈퇴하더라도 이번 사태는 끝나지 않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를 둘러싸고 영국은 앞으로 최소 몇 년 동안 시끄러울 것입니다. 영국 지배계급 입장에서선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고 이게 어떻게 해결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 브렉시트를 한다고 자본주의가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영국 자본가들에게 대단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좀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복지 제공의 성격이 훨씬 두드러져서 지방정부에 개입이나 가능성을 훨씬 더 열어두는 주장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국의 지방 정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기에 영국 사례에 기초해 일반적인 주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경우 지방정부는 일부 지방세가 있긴 하지만 재정을 대부분 중앙정부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운신할 여지는 중앙정부의 결정에 크게 제약을 받고 갈수록 그런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온갖 지방정부들이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긴축을 실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당이 운영하는 지방정부의 정책이 보수당 중앙정부의 정책과 거의 구별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아주 소수지만 노동당이 운영하는 지방정부가 주목을 받는 사례들은 중앙정부의 복지 삭감 요구에 반발해서 거기에 도전했던 사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꽤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반동적 요구를 거부하고,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제공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라고도 봅니다.

지방정부 질문과 연동된 것일 수 있는데 한국 전교조의 경우, 진보 교육감이 당선했을 때 지방교육청에 참가하는 일들이 꽤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지방정부 등에 노동조합이 참가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페미니스트들이 지방정부나 국가 기구에 많이 참가하는데 그에 대해 영국 사례를 소개해 줄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질문에 답하자면, 말씀하신 대로 영국에서도 노동조합이 교육기구에 참가하는 일이 흔합니다. 영국에서는 근래에 일부 학교들이 정부가 아니라 비영리 민간 기구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도 합니다만(아카데미 시스템) 어쨌든 그런 곳에서도 노동조합이 운영에 참가합니다.

레닌은 노동자들이 정치적 주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어떤 기회든 활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구들이, 노동조합이 결코 동의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동의하도록 이끌어 내는 수단으로 아주 종종 활용됩니다. 예컨대, 당

신이 그런 기구에 파견된 노조 관계자라면 이런 말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 교육 예산이 이것밖에 안 돼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한된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지 함께 고민해 봐요.” 그 결과 당신은 뽀뽀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책임감을 느껴 인력 삭감이나 임금 동결 등에 동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이 엄청나게 큼니다.

둘째 질문인 페미니스트들이 정부에 진출하는 사례, 물론 있습니다. 자칭 페미니스트들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죠. [얼마 전까지 영국의 보수당 총리였던] 테리사 메이는 자신이 페미니스트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에 영국 의회에서 ‘왜 여성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냐고 [노동당 대표인] 제러미 코빈에게 공격받자 그녀는 ‘감히 내게 그런 말을 하다니. 남성인 주제에 나에게 여성 입장을 옹호하는 게 뭔지 알가 알부 말라’하고 대꾸했습니다.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도 페미니스트를 자처할 것입니다.

페미니스트 여부가 논란이 될 뿔 인물로는 아이슬란드 총리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여성의 권리를 꽤 진지하게 옹호한 투사였습니다. 그럼에도 아이슬란드 정부가 부자와 은행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니다. 흔히들 아이슬란드는 그래도 다른 국가들보다 괜찮게 대응했고 특히 은행들이 요구한 돈을 주지 않았다고 오해하는데, 실제로는 은행들이 원하는 돈을 결국 받아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겠지만, [페미니스트냐 아니냐보다] 어느 계급을 대변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우리는 여성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요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계급 문제가 전면에 드러날 것입니다.

통역 천경록 녹취 연은정·한가은

칠레, 홍콩, 카탈루냐, 수단, 레바논 ...

반란에 휩싸인 세계

세이디 로빈슨

고무적인 항쟁의 물결이 몰아치며 자본주의 “정상 상태”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이 항쟁들은 우리가 체제에 도전할 수 없다는 말이 거짓임도 드러내고 있다. 최근 몇 주 사이에 레바논, 칠레, 홍콩, 아이티, 에콰도르, 이라크, 수단, 카탈루냐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항쟁마다 저마다의 계기가 있었다. 칠레에서는 지하철 요금 인상, 아이티에서는 물자 부족과 부패가 계기가 됐다. 에콰도르 시위대는 긴축 정책에 맞서, 이라크 시위대는 빈곤과 부패에 맞서 투쟁했다.

주목할 점은 이 많은 운동들이 훨씬 더 심원한 변화를 요구하는 투쟁으로 빨리 진전됐다는 것이다.

아이티에서는 새로운 사회 세력들이 반정부 투쟁에 참여하면서 운동이 승리할 방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10월 24일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를 가로질러 행진했다. [행진에서] 아이티종교협회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다. “현 정권과 체제를 그대로 둔 채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폭력 시위에 반대해 직접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시위 참가자들도 있었다.

홍콩에서는 시위가 21주째 이어지고 있다. 이 운동은 송환법에 반대하며 시작됐지만, 지금 홍콩 민중은 정권 퇴진, 민주주의 증진, 경찰 해체를 요구한다.

레바논에서는 왓츠앱 메시지를 이용한 음성 통화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 때문에 시위가 촉발됐다. 며칠 만에 시위대는 이렇게 외쳤다. “혁명! 혁명!”

왜 지금 이토록 투쟁이 분출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전투적인가?

물결

이런 시위들이 난데없이 벌어진 것은 아니다. 아이티에서는 2017년 현 대통령 조브넬 모이즈가 집권한 이래 시위가 계속 있었다. 애초에 시위대는 모이즈한테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제 아이티 시위는 정권 퇴진을 원한다.

홍콩에서 민주주의 확대를 요구하는 운동은 낡은 것이 아니다. 2014년 홍콩 거리를 휩쓴 ‘우산 혁명’도 같은 요구를 했다.

많은 경우 지금 분출하는 항쟁은 오랫동안 계속돼 온 투쟁이 최근 새 국면을 맞은 것이다.

이 체제가 대중이 바라는 바를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항쟁이 계속 벌어지는 것이다.

이 운동들은 2007~2008년 금융 위기 이래 10년간의 긴축, 정치적 격동, 경제적 불안정성 끝에 벌어진 것들이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청년실업률은 25년 넘게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2017년에 이 지역 청년실업률은 30퍼



사진 출처 Zeyad Meiti



사진 출처 Studio Inernd(베를린)

10월 27일 홍콩 시위 송환법이 철회된 이후에도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센트에 이르렀다.

알제리인 중 3분의 2 이상이 30세 이하다. 2018년 1사분기 당시 그중 4분의 1 이상은 실업 상태였다.

알제리에서는 대통령 압델라지즈 부테플리카가 5선 출마를 선언한 것이 올해 초 항쟁을 촉발했다. 그러나 청년 실업에 대한 극심한 불만이 수년간 심화돼 왔다.

긴축

경제 위기와 긴축으로 임금이 대폭 삭감되고, 실업이 늘고, 복지·수당 제도가 개악되고, 연금이 줄었다.

앞서 열거한 항쟁들보다 규모는 작지만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이나 그리스 총파업 같은 행동들도 사람들의 분노를 보여 주는 또 다른 징후다.

긴축의 파장이 모든 곳에서 고르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긴축 공격 때문에 체제에 대한 불만이 전반적으로 자라났다. 이에 더해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체제가 고장났다고 느낀다.

현재 몰아치는 항쟁의 물결은 쉽게 사그라들 볼품 같은 것이 아니다.

2011년 아랍 혁명은 아랍 지역의 위기와 불안정성이 낳은 가나긴 혁명적 과정의 결과였다. 최근아랍 지역에서 벌어진 [수단·알제리 항쟁도 그런 과정의 일부다. 급진적 변화가 이 지역을 휩쓸 때까지 더 많은 항쟁이 벌어질 듯하다.

이런 항쟁들의 뿌리에는 체제의 불안정한 본성이 있다. 혁명이 카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위기를 맞는 과정을 설명했다.

경제 침체가 정치 위기를 낳는다. 제국주의 전쟁이 불안정을 키운다. 이윤을 내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장들은 노동자들을 공격한다.

저항의 물결이 이는 것은 수면 아래에서 이런 요인들이 일반화됐기 때문이다. 한 곳에서 일어난 항쟁이 다른 곳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오늘날 경제·정치가 위기에 빠져 있다. 어느 한 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말이다.

체제에 대한 분노와 냉소가 광범하고, 사회 최상층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이런 시기에는 개별 시위가 신속하게 체제에 맞선 도전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한 곳에서 일어난 투쟁이 다른 곳의 사람들에게 투쟁할 자신감을 북돋을 수도 있다.

2011년 ‘아랍의 봄’ 당시 이런 일이 벌어졌다. 2010년 12월 튀니지에서 실업과 고물가 때문에 시위가 벌어졌다. 이 시위는 혁명으로 발전해, 튀니지를 23년 동안 지배한 독재자 벤 알리를 한 달도 안 돼 퇴진시켰다.

튀니지 항쟁은 이집트 혁명을 촉발했다. 이집트 사람들은 호스니 무바라크 독재정권 하에서 30년 동안 신음했

▲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열린 시위 심각한 실업과 빈곤, 형편없는 공공서비스, 정부의 부패 등에 분노한 이라크 민중은 정부의 유혈 탄압에 굴하지 않고 저항을 지속하고 있다

는데, 무바라크는 혁명 발발 18일 만에 쫓겨났다.

이집트 혁명이 승리하자 리비아, 바레인, 예멘, 시리아 등 곳곳에서 항쟁이 분출했다.

역사 속에서 이같은 투쟁의 연쇄적 파도가 여러 차례 몰아쳤다.

1968년 반란 당시 급진적인 흑인 운동과 여성 차별에 맞선 운동은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 학생 반란, 노동자 파업과 결합됐다.

프랑스에서 대중 파업과 시위가, 미국에서 소요 사태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프라하의 봄’이, 아일랜드에서 시민평등권을 둘러싼 전투가 벌어졌다.

제1차세계대전은 러시아 혁명으로 종식됐다.

당시에도 대중은 전쟁의 고통에 신음하며 분노가 널리 확산되고 있었고, 변화 정취 염원도 굳건했다.

러시아 혁명 승리 후 전 세계에서 혁명적 투쟁과 항쟁이 분출했다.

자본주의는 투쟁을 부르는 불안정한 체제다. 그렇다고 혁명이 일어나길 그저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

지금 세상에 대한 분노는 오른쪽으로 이끌릴 수도 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 2018년 브라질 대선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당선, 유럽 곳곳에서 극우의 선거 득세는 우려스런 징후들이다.

체제에 대한 분노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투쟁에 나서진 않는다.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하에서 부를 창출하며, 이들에게는 거대한 잠재력이 있다.

그러나 이 체제는 우리가 스스로 무력하고 소외됐다고 느끼게 한다. 그리

고 이것은 사람들이 지배계급의 사상에 더 취약해지게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투쟁이 승리하게끔 할 수 있을까?

지금 투쟁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랍의 봄’에서 몇몇 교훈을 얻은 사람들도 있다.

권좌에 앉은 사람 몇 명 같아치우는 것으로는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바꾸기에 부족하다. 지배계급과 그들을 수호하는 국가에 맞서야 한다.

그러나 ‘아랍의 봄’이 서방의 지원을 받은 혹독한 반혁명의 철퇴를 맞은 것을 보면, 지배계급이 저항을 분쇄하려 어떤 짓까지 할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지금과는 다른 종류의 사회를 쟁취하려면 지배계급 자체에 맞설 태세가 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군대, 경찰 같은 무장력의 힘에 직면하면 이런 일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지배계급과 그들을 비호하는 자들을 모두 합쳐도 평범한 사람들이 훨씬 다수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는 체제 자체를 멈출 힘이 있다.

최근 벌어진 항쟁들에서도 노동자들은 중요한 구실을 했다. 칠레·카탈루냐·수단에서 총파업이 벌어졌고, 홍콩에서도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다.

노동자

이런 항쟁들이 전진하려면 노동자들이 조직된 노동자로서 [그 힘을 발휘하며] 자의식적으로 항쟁에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

모든 항쟁들에는 노동자 부문들 사이에 긴장이 있다.

모든 운동들에서는 전술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진다.

개혁주의자들은 체제가 온존하는 ‘안전한’ 길로 항쟁의 방향을 틀고자 한다. 노동자들이 “전문가들”에게 [운동의 방향을] 맡겨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스스로 투쟁하고 기존 방식에 타협하길 거부할 때 항쟁이 승리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수단 항쟁 때도 독립 노동조합 연맹 수단직능인협회(SPA)가 운동의 전진에 힘을 보탰다.

알제리에서도 노동자 총파업이 항쟁을 전진시켰다. [2011년] 이집트에서도 노동자 파업이 무바라크 퇴진의 핵심 고리였다.

칠레에서도 칠레 최대 노총 CUT와 20개 소규모 노동조합 연맹들이 10월 24~25일 양일간 총파업을 벌였다. 강력한 노동조합인 구리노동자조합(FITC)도 총파업에 동참해 칠레 국영 구리 생산기업 코필코가 보유한 칠레 곳곳의 광산에서 파업이 나섰다.

노동자는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만큼 숫자도 많고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있다.

이를 목표로 투쟁하는 혁명적 조직 건설이 이런 항쟁들에서 결정적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678호 / 번역 김준호

톨게이트 전원 직접고용은 ‘배임’이라더니

(도로공사 사장)

동생 기업 특혜로 배임 혐의 제기된 이강래

양효영

최근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배임 혐의가 제기됐다. 도로공사가 발주하는 ‘스마트 가로등’ 사업의 핵심 부품을 이강래 사장 동생들이 경영하는 회사가 독점 공급해 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강래 사장의 동생들이 최대주주와 사내이사인 ‘인스코비’는 스마트 가로등의 핵심 부품인 PLC칩의 80퍼센트 가량을 도로공사에 납품하고 있다.

둘째 동생은 JTBC의 취재에서 “(인스코비의) 경영권을 장악하려고 필요 없는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도로공사의 사업 정보를 미리 알고 경영권 장악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인스코비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해 왔다는 혐의도 제기됐다.

이강래 사장은 모르쇠로 나왔다. 이강래 사장이 몰랐다는 건 믿기지 않지만, 인지여부와 상관 없이 이 자체가 친인척 권력을 이용한 부당이익 취득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게다가 동생들뿐 아니라 이강래 사장의 배우자도 인스코비 자회사 인스바이오팜 주식 4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국가 권력자들과 ‘연줄’을 맺은 기업들이 투자 정보를 미리 알고 시장에 먼저 진입하거나, 특혜를 받아서 잇속을 챙기는 건 전형적인 특권형 부패다.

인스코비는 정경심 교수가 얼마 전까지 무려 1만 2000주를 보유했던 업체이기도 하다. 이는 더 큰 부패 커넥션의 일부일 수 있다.



불법파견에 이은 배임 1500명이 대량하고 당하는 동안 이강래 일가는 남품 특혜로 이익을 봤다

‘스마트 톨링’을 이유로 수납원들을 해고로 내몰더니, 정작 이강래 일가는 ‘스마트 가로등’ 사업으로 배를 불러 온 것이다.

게다가 이강래 사장은 톨게이트 노

동자 전원 직접고용이 불가하다면서 재판 없이 직접고용 하면 과도한 세금이 들어가서 배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핑계 대 왔다.

하지만 진짜 배임은 누가 하고 있었

나. 도로공사의 직접고용 거부 근거들이 정당성 없는 위선일 뿐임이 드러났다.

민주일반연맹은 10월 29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이강래 사장의 배임 혐

의를 규탄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런 부패 혐의가 제기되는 와중에도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다.

얼마 전, 도로공사는 대법원에서 직접고용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에게도 수납업무를 주지 않고 원래 일하던 곳에서 한참 떨어진 곳으로 전환 배치를 강행했다. 사실상 직접고용 되도 힘든 일을 줄 것이고 조건도 하락시킬 것이라는 협박이다.

하지만 최근 을지로위원회 중재안을 거부하고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전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싸우는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정당성을 확인해 준 판결도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2심 계류자(1심 승소자) 두 명이 낸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 판결은 이미 직접고용 대상자인 두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판결이지만, 대법원 판결이 영업소와 근무기간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수납원에 대해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한국노총과 도로공사가 한 합의는 민주노총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10월 26일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는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동자 400여 명이 모두 모였다. 노동자들은 이날 김천 도로공사 본사를 계속 지키면서 직접고용 투쟁을 이어 갈 것을 결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강래를 해임하고,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전원 직접고용해야 한다.

김용균재단 출범

“억울한 죽음을 없애는 건 살아 있는 우리의 몫”

10월 26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이하 김용균재단) 창립 총회와 출범 대회가 열렸다.

김용균재단은 발전소 청년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 씨를 추모하며 산업재해 추방과 노동자 건강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와 안전하고 차별 없는 일터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

김용균 씨의 죽음과 이에 대한 항의 운동은 해마다 노동자 2400명이 산업재해로 숨지는 비극과 비정규직 차별의 현실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여전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열렸다.

창립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김용균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이렇게 말했다.

“아들이 다시 이곳에서 살아 숨 쉬는 것 같아 기쁩니다. 비정규직이라 당한 용균이의 처절한 죽음을,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억울한 죽음을 없애는 건



김용균 씨의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몫이 남아 있다

살아 있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이 사회에 밝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이날 출범 대회에는 김용균 씨의 동료인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해 그

간 투쟁에 참여해 온 민주노총 소속 여러 노동자들과 노동운동 활동가들, 김용균 시민대책위 소속 단체 활동가들, 산업재해 피해 유가족들과 세월호 유가족들, 김용균 특조위 위원들 등 100여 명

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앞으로 김용균재단은 고(故) 김용균 노동자 추모 사업, 산재 사고 예방과 대응·지원 사업, 비정규직 철폐 사업, 청년노동자 권리 보장 사업 등의 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

김미숙 이사장은 “용균이 사고 후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취지를 비켜갔다”며 김용균재단이 운동을 이어 나가야 할 이유를 설명했다. 김용균 씨 1주기(12월 10일)가 곧 다가오는데도 발전소 현장은 여전히 “살인 병기”와 같다. 이런 현실에서 김용균재단의 출범은 더욱 뜻깊다.

문재인 정부는 ‘고(故) 김용균 사망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민영화·외주화 철폐, 직접고용 정규직화, 발암물질이 흩날리는 작업 환경 개선, 노무비 착복 근절, 인력 충원,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선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

정 등 노동자들의 안전과 처우를 위한 개혁 조치들을 계속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 문제로 자유한국당과 ‘사생결단’을 낼 것처럼 싸우다가도 노동계약 처리에는 신속하게 합의했다. 기업의 이윤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데서는 주저함이 없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근혜의 석탄 발전부문 민간 개방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김용균재단은 김용균 씨의 죽음 이후에도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정부와 기업에 맞서 여러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김용균 씨 1주기를 맞아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 여러 단체들과 함께 비정규직, 위험의 외주화, 공공부문 민영화, 안전하지 않은 노동환경 등을 알려 나가고 투쟁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김용균재단이 “노동자들의 목숨으로 기업의 이윤을 남기”는 사회를 바꾸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

박혜신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



〈82년생 김지영〉의 한 장면 출산 후 달라진 삶을 마주하게 된 여성 노동자들의 처지를 잘 묘사했다

영화평 〈82년생 김지영〉

변했지만 변하지 않은 여성 차별을 담담하게 그린다

양효영

영화 〈82년생 김지영〉(감독 김도영)이 개봉한 지 일주일 만에 관객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 영화의 원작은 조남주 작가의 동명 소설이다. 2016년 출간된 이 소설은 당시 페미니즘 열풍 속에서 20~30대 여성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베스트셀러 자리에 올랐다.

이 영화를 둘러싸고 일각에선 또다시 남 대 여 논쟁이 붙었다. 온라인 상에서 일부 남성들은 영화에 낮은 별점을 주고 여성 피해만 강조했다며 비난한다. 최근 한 여성 아나운서도 “부정적인 것들에만 주목[해] ... 불편”했다고 평했다.

하지만 영화는 성 대결을 결코 강조하지 않는다. 흥행 성적에 보여 주듯, 많은 평범한 여성과 남성들이 영화 내용에 공명하고 있다. 아무나 댓글을 남길 수 있는 ‘네트즌 평점’에서는 이 영화에 대한 남녀 평점이 극단적으로 갈리지만, 영화를 실제로 본 관람객만 쓸 수 있는 ‘관람객 평점’에서는 남녀 모두 9점대로 비슷하다.

영화는 소설을 기반으로 했지만 소설보다는 현실의 여성 차별을 좀 더 일면적이지 않고 설득적으로 묘사했다. 현실의 평범한 여성과 남성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답을 찾아가는 모습이 소설에 비해 대폭 보강됐다.

영화는 현실에 있을 법한 한 여성의 삶을 그린다.

1982년에 태어난 김지영 씨(정유미 분)는 남편, 어린 딸과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남편 정대현 씨(공유 분)는 직장을 다니고, 김지영 씨는 홍보업체에서 일하다 출산을 하면서 퇴사했다.

김지영 씨는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 하루종일 울고 보채는 아이와 씨름하고 밀린 집안일을 한다. 손목이 시큰거려서 찾은 병원에서 의사는 “밥은 밥통

이 하고, 빨래는 세탁기가 하는데 요즘 여자들은 뭐가 힘들다는 건지”하고 툭 명스레 말한다.

유모차를 끌고 공원으로 나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바람을 쐬던 김지영 씨는 지나가던 직장인들이 자신을 보고 “남편 돈으로 커피 마시며 놀아서 좋겠다”고 수근대는 말을 듣는다.

언젠가부터 김지영 씨는 석양을 보면 마음이 쿵 하고 무너지는 것 같고, 있었던 일들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던 중에 김지영 씨는 가끔 엄마, 동아리 여자 선배, 할머니로 ‘빙의’한 듯 행동하기 시작한다. 영화는 남편 정대현 씨가 아내가 걱정돼 정신과 의사와 상담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영화는 할머니, 엄마 등 윗세대 여성의 삶을 함께 그리면서 김지영 씨가 ‘아프게’ 된 배경을 조명한다.

영화는 출산과 육아 이후 완전히 달라진 삶을 마주하게 된 여성이 겪는 좌절감을 생생하게 그려낸다. 이 사회의 김지영 씨‘들’은 자신의 직장 상사처럼 당당한 커리어우먼을 꿈꿨지만, 결국에는 아이 때문에 퇴사해야 하고 갑갑한 집안에 발목 잡히고 육아의 굴레에 시달려야 한다.

할머니나 엄마와는 달리 김지영 씨는 고등교육을 받고, 직장에서도 남성 동기들과 나란히 경쟁한다. 하지만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은 김지영 씨에게 다시 윗세대 여성들이 겪은 굴레를 씌운다.

김지영 씨도 복직하고 싶지만 아이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 아이를 늦게까지 봐줄 수 있는 곳도 없고, 베이비시터를 구하기도 힘들다. 남편들이 육아 휴직을 쓰고 아내를 돕고 싶어도 승진 경쟁과 퇴사 압박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현실도 이 영화는 보여 준다.

아등바등해 보지만 김지영 씨와 남편의 개인적인 노력들은 매번 막다른 길에 부딪힌다.



김도영 감독, 118분

이 영화는 사랑만으로 모든 게 가능할 것 같던 결혼 생활이 출산과 양육을 거치며 얼마나 뒤를리고 고통스럽게 변하는지 보여 준다.

이 영화는 ‘여성은 모두 피해자고 남성은 모두 가해자’라는 식으로 그리지 않는다. 일부 남성들은 ‘몰카’를 찍고(불법촬영), 단독방에서 성희롱을 한다. 하지만 또 다른 남성들은 이를 비판한다. 그리고 현재의 삶에 순응하려며 김지영 씨를 끌어내리는 사람들 중에는 시어머니나 고모 같은 윗세대 여성들도 있다는 점을 이 영화는 잘 그려낸다.

김지영 씨가 ‘빙의’를 할 때마다 남편은 자신과 결혼해서 아내가 불행해진 것 같아 자책한다. 이런 고통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모두 개인에게 떠넘겨져 있는 사회에서 개인들이 겪는 관계의 왜곡을 보여 준다.

영화의 마지막도 좀 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소설과 완전히 다르다.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오늘날 여성들의 삶을 담담하게 그려내어, 여성 차별을 낳는 사회와 그것이 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게끔 만든다.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변화·미세먼지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ח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 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변화, 미세먼지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자기결정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우리는 모든 난민을 억류 상태에서 풀려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에서 살 권리를 위해 투쟁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이 법은 ‘북한의 위협’과는 큰 관계가 없고 오히려 남한 내 정치적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마녀사냥으로 권력층이 종종 사용하는 무기이다.

갇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자,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혁명적 조직은 노동조합 운동으로부터 생겨나 세워질 수 없고, 오히려 자본주의에 혁명적으로 반대하는 소수(노동자뿐 아니라 청년·학생도 포함됨)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이라는 수단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점검하고,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긍되면 우리와 함께할시다.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대학로 본원처럼 정규직화하라

10월 30일 분당서울대병원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분당서울대병원분회)이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경고 파업에 나섰다. 노조는 11월 1일 전면 파업에 이어 사측이 계속 직접고용을 회피하면 11월 둘째 주에도 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장은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일주일 가까이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이날 경고 파업 집회에는 분당서울대병원 노동자 300여 명과 연대자 200여 명이 참가해 본관 앞 로비를 가득 메웠다.

파견용역 노동자 1300명이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일한다. 국립대병원 중에 비정규직이 가장 많다. 이들은 청소, 시설관리, 간호 보조, 환자 이송, 외래 접수 등 병원 곳곳에서 일하고 있다. 2003년 병원 개원 당시에 입사해 십수 년을 일한 노동자도 많다.

개원 이래로 분당서울대병원은 계속 확장됐고 높은 수익을 내 “본원을 먹여 살리는 본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인력 부족, 고강도 노동에 시달려 왔다.

9월 3일 서울대병원 본원에서 파견용역 노동자의 직접고용 합의 소식이 들려오자 본원(분당)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화될 거라는 기대가 한껏 높아졌다. 그동안 사측이 본원을 핑계 삼아 직접고용을 미뤘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본원이 합의하자 ‘본원과

본원은 다르다’며 다시 직접고용을 회피하고 있다.

이날 파업 집회에 참가한 환자 이송 대표 최승철 부분회장은 울분을 쏟아냈다.

“9월 3일 일을 마치고 집에 갔는데, 어머니와 아내가 너무 반갑게 맞으며 저녁에 갈비를 주더군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야 뉴스 보니까 정규직 됐대며?’ 하고 물으셨어요. 아내도 ‘본원이 됐으니까 본원도 되는 거지?’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본원이 아직 안 했으니까 기다려 보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는 ‘거기와 우리는 달라. 원장이 달라서 안 돼’ 하고 말합니다. 정말로 화가 납니다.”

사측은 여러 핑계와 조건을 달며 ‘자회사’를 종용하고 있다. ‘직접고용하면, 정년이 넘어 축탁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할 수 없다’, ‘간호 보조 업무를 하는 병동 사원들은 새로 채용 절차를 거쳐 업무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등등.

노동자들은 사측 주장의 모순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일은 힘들고 임금은 조금 주니까 짧은 사람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축탁직을 만들어 놓고는 이제 와서 직접고용 하면 축탁직 정년 유예를 1년만 준다고 합니다. 병원이 번창할 때 어두운 곳에서 묵묵히 일한 우리를 1년 후에 거리로 내몰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자회사로 가면 유예기간을 3년을 준다고 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



10월 30일 분당서울대병원 로비에서 열린 파업집회 “큰집(본원)이 정규직화해야 ‘작은집’도 한다더니 이제와 오리발 내미네!”

은 일을 하는데 자회사로 가면 3년 일할 수 있고, 직접 고용하면 왜 1년만 일할 수 있습니까? 사측은 우리를 편 가르고 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직접고용 정년 3년 유예 정취합시다.”(미화 대표 황규석 부분회장)

“병원이 채용 절차를 계속 문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병원 오픈할 때부터 간호부에서 서류 심사와 면접을 보고 입사했는데 무슨 채용 절차를 또 거쳐야 한다는 건가요? 우리가 능력이 없

으면 왜 지금까지 근무하게 둔 건지 원청에게 묻고 싶습니다. 채용 비리 때문에 채용 절차가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업무량에 비해 임금이 너무 적어 그동안 인력 부족에 시달리며 일해 왔는데, 채용 비리가 우리랑 뭘 상관입니까?”(간호직종 대표 김부영 부분회장)

그동안 사측은 ‘환자 직접 업무’와 ‘간접 업무’를 나눠 일부만 직접고용을 할 수도 있다고 노동자들을 이간질해 왔다. 그러나 본원과 경북대병원이 비

정규직 노동자 전원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합의하면서 더는 이런 이간질이 먹이지 않게 되자, 이번엔 정년과 채용 절차를 걸고 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말처럼 이 또한 아무런 명분이 없다.

서울대병원 본원과 경북대병원에 이어서 나머지 국립대병원들도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화해야 한다.

성지현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 파업권 제약 논란

사측은 약속대로 정규직 전환하라

서울대학교병원이 ‘정규직 전환 이전에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먼저 합의해야 한다’며 비정규직(파견용역직) 정규직화 약속을 흔들고 있다.

앞서 9월 3일 서울대학교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은 파견용역직 노동자 614명과 보라매병원 200여 명 정규직화 약속을 사측한테 받아냈다. 2년 가까이 싸워 온 투쟁의 성과였다. 특히 조국 사태로 정부가 위기를 겪던 상황에서 투쟁에 나섰던 것, 정규직 · 비정규직 공동 파업 등 정규직의 연대와 3개 산별연맹의 공동 투쟁 등 연대 투쟁을 했던 것의 효과가 빛났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은 정규직 전환 시점(11월 1일)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병원 측이 제시한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겠다고 협박한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어처구니없게도 병원 측은 청소 노동자들의 80퍼센트를 필수

업무유지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에 꼭 필요한 노동자들이 아니라서 직접고용 안 한다면 사측이 이제 와서 ‘필수업무유지’를 강요하는 것이다.

필수업무유지 제도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도입된 악법 중에 악법이다. 노동자들이 파업할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되는데, 필수업무유지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법률적으로 파업이 금지된다. 더구나 이 ‘필수’의 범위가 광범해 병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이 족쇄에 묶여 파업 힘을 제대로 사용하는 데 제약을 받는다.

필수업무유지

서울대병원 측이 이런 악법을 이용해 정규직 전환을 압박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투쟁 능력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장차 노동자들이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싸우게 될 상황을 대비한 조치다. 병원 측이 2년 내내 자회사 전환을 내세울 때 든 이유도 ‘파업에 대처하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그 점에서 노조가

두 달 전 정규직화 합의를 할 때 ‘전환 전 필수유지업무 비율 합의’를 하기로 한 것은 부적절했다.

최근 공공부문에서 노동자들이 직접고용되거나 자회사로 전환된 곳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자들이 턱없이 부족한 임금 · 처우에 불만을 터뜨리며 투쟁에 나서자, 사용자들이 어떻게든 파업 효과를 제약하려고 달려들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엘지유플러스 소속 하청업체 노동자들(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한마음지부)은 원청 직접고용으로 전환됐다.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턱없이 낮은 임금을 인상하려고 투쟁을 준비했다. 그런데 현행 필수유지업무 제도에 따르면 노사가 협정을 맺거나 합의하지 못하면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돼 있다. 한마음지부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입단협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고 2주 뒤에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필수유지업무 비율이 결정됐다.

KAC공항서비스 소속 노동자들도



10월 25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기자회견 “파업권 제약하려 하는 서울대병원 규탄한다”

7월 중순 임금교섭 조정중지 결정이 났지만 아직까지 필수유지업무 비율이 결정되지 않아 손발이 묶여 있다. 서해선 노동자들도 9월 25일 임금교섭 조정중지 결정이 났지만 경기지노위는 10월 21일에야 필수유지업무 비율을 평균 68.5퍼센트로 책정해 파업권을 심각하게 제약했다.

이처럼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이용한 파업권 제약 시도는 문재인 정부가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강요하는 제약의 일부다.

서울대병원 사측은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정규직화 합의문에 조건을 단 듯하다.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민들레분회)은 사측의 부당한 강요가 정규직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 분노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10월 31일 파업을 예고하고 11월 1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높은 비율의 필수유지업무 압박을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 약속을 지켜라.

장호중

민간위탁 서해선

최저임금과 살인적 노동강도로 쥐어짜다

공공운수노조 서해선지부 소속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대폭 인상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10월 29일 파업에 돌입했다.

서해선은 부천 소사역에서 안산 원시역까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을 운행하기 위해 지난해에 개통한 신생 전철 노선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경비 절감을 우선하면서 새로 확충되는 전철 노선의 운영을 다단계 위탁으로 떠넘기는 기형적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서해선 역무 관리와 시설물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이 노동자들은 서울교통공사가 100퍼센트 출자한 자회사인 소사원시운영(주)에 소속돼 있다. 국토교통부가 20년간 운영권을 이레일에 넘겼고, 이레일이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인 소사원시운영(주)에 재위탁했다. 차량 정비와 열차 운행은 한국철도공사가, 역무 관리 및 유지보수는 소사원시운영(주)이 따로 맡고 있다.

정부가 시민의 발을 책임지는 전철의 운영권을 돈벌이에 혈안이 된 민간 기업에 떠넘기는 바람에 시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노동자들은 열악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서해선 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고 인력 부족으로 살인적 노동



정부의 신생 전철 민간위탁 안전과 노동조건은 뒷전 10월 29일 서해선지부 파업 출정식

강도에 시달린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1km당 50명의 인력으로 운영되는데, 서해선은 고작 6명에 불과하다.

이런 조건 때문에 지난 1년간 이직률이 무려 30퍼센트가 넘는다. 퇴직자가 생겨도 사측은 곧바로 인력 충원을 하

지 않는다. 결국 남은 노동자들은 휴게 시간에도 근무를 해야 하고 야간근무에도 시달리고 있다. “기계팀 6명이 승강기, 소방, 위생, 환기, 냉난방, 열공조 6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 명이 어떻게 12개 역사에 존재하는 6개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가?”(10월 29일 파업출정식 투쟁결의문)

노동자들은 휴게시간도 없어 역사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일한다고 한다.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3년 전 구의역에서 사망한 김군이 생

각난다. 노동자들은 사측이 안전에는 관심도 없다고 주장한다.

소사원시운영(주)는 이렇게 노동자들을 쥐어짜 32억 원의 단기순이익을 남겼다. 그런데도 회사는 겨우 3.2퍼센트 임금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다. 내년에도 최저임금 수준에 만족하라는 것이다.

“올해 1만 원 인상됐는데, 최저임금을 겨우 맞춘 수준이다. 편의점 알바생만큼 월급을 주고 있다. 사측의 임금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역무 최선우 대의원)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뿐 아니라 10년 경력자나 1년 경력자나 같은 임금을 받는 임금체계를 개선하라고 요구한다. 또, 사측이 노조와 합의 없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서 체불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한다.

노동자들의 주장처럼, 자회사 노동조건의 실질적 결정권이 있는 원청 서울교통공사가 책임져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서울교통공사가 자회사를 늘려 서비스의 질과 노동조건을 하락시킨 데 책임이 있다.

노동조건 개선은 서비스 질 개선과도 직결될 수밖에 없다. 올해 2월 노조를 만들고 투쟁에 나선 서해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응원한다.

강철규

현대중공업의 직능·성과급제 도입 시도

임금 억제와 노동자 경쟁·분열 부추기기

현대중공업은 9월 “생산기술직 육성체계” 계획을 내고, 최근 일부 부서에서 실행하기 시작했다. 이 계획의 요지는 생산직 노동자들의 직무 능력과 업무 성과를 평가해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승진에도 차별을 두는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사측은 노동자들의 직무별 기술을 표준화해 노동자들의 기술별 숙련도와 “생산성”을 평가한다. 그 맹점에 대해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회사는 노동자가 빨리 많은 일을 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대중 일하게 되어 결과가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꼼꼼히 작업하려면 천천히 일해야 합니다. 게다가 노동자들의 컨디션이 날마다 다르고, 요즘은 회사에 불만이 많아 태업도 많습니

다. 없죠.”

사측은 이것이 노동자들의 숙련도 향상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포장하지만, 노동자들에게 나쁜 효과를 낼 게 뻔하다.

노동자 줄세우기

첫째, 노동자들은 생산성 압박을 더욱 강하게 받을 것이다. 현장 관리자의 일상적인 평가 속에서 노동자들은 더 빨리 더 완벽하게 일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을 것이다. 평가 항목에 사고 건수도 포함되므로 노동자 스스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산재를 은폐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

게다가 사측은 “다기능 습득”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원래 직무와 상관 없는 기술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업 위기가 지속되

면서 일감의 양이 유동적이게 되자 전환배치를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심산이다.

실제로 이미 사측은 일감이 바닥난 해양사업부에서 이런 일을 추진했다. 해양사업부의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배 구조물에 전기 시설을 설치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들은 자기 일이 끝나면 대기합니다. 회사는 이들을 ‘잉여 인력’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은 지금 자기 업무와 아무 상관 없는 용접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생산기술직 육성체계의 일환인 직무별 ‘기술 표준화’는 기본급 차등 책정에 활용될 수 있다. 이미 이 제도는 임금 차별을 포함하고 있다. 평가에 따라 승진과 보상에 차별을 두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안착되면 임금의 다

른 부분들(성과급이나 상여금 등)로도 차별이 확대될 수 있다. 또 정부의 직무급제가 호봉제 폐지를 노리고 있듯이, 사측도 이를 노릴 수 있다.

이것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쟁취한 것을 다시 빼앗으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1987년 투쟁으로 전사원 호봉제를 쟁취했고 상여금 차등제를 폐지했다.

셋째, 임금 차별은 노동자들을 줄 세워 경쟁을 강화하고 분열시킬 수 있다. 사측은 높은 등급의 노동자들에게 좋은 대우를 약속해 노동자들이 각자 살 길을 찾으려 한다. 비열하게도 수년간 지속된 조선업 구조조정 속에서 팍팍해진 고용 불안 심리를 파고드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잦은 교육과 일상적인 평가에 시달리며, 평가 권한을 갖고 있는 현장 관리자들의 눈치를 더

보게 될 수 있다.

사측이 압박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지속되는 조선업 위기가 있다. 특히, 올해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줄어 8월 기준 현대중공업의 수주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40.5퍼센트나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더욱 전가하려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문재인 정부는 친기업 행보를 강화하고 노동개악을 추진하면서 사측의 공격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처럼 생산기술직 육성체계는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격이다. 그래서 투쟁이 중요하다. 기층 활동가들이 생산기술직 육성체계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김지태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이름

후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시/군/구까지)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종교동학교 () 기타

회비약정액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02-2271-2395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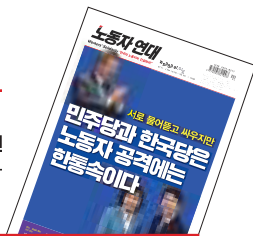
〈노동자 연대〉 기사를 빠짐없이 보는 방법

★ 안드로이드 앱 플레이스토어에서 “노동자 연대 알리미”로 검색

★ 페이스북 “노동자 연대”로 검색 (“신문”을 팔로우하셔야 합니다)

★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로 검색, 선택 후 Start 버튼

★ 트위터 @wspaper



계속되는 칠레 항쟁

100만 시위가 산티아고를 휩쓸다

〈노동자 연대〉 303호를 제작중인 10월 30일, 노동자 대중의 대규모 항쟁에 밀린 칠레 대통령 세바스티안 피네라는 11월 16~17일 칠레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취소했다. 강력한 운동이 세계 지배자들에게 통쾌하게 한 방 먹인 것이다. **개비 소프**가 이 고무적 항쟁의 소식을 전한다.

10월 25일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칠레 수도 산티아고 거리를 휩쓸었다. [칠레 인구는 2000만 명이 채 안 된다.] 시위대는 대통령 세바스티안 피네라 퇴진과 [독재자 피노체트의 유산인] 헌법을 새로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전까지의 시위에 밀린 피네라는 내각을 전원 경질해야 했고, 이제는 “대중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정부를 새로 구성하겠다고 한다.

피네라는 이번 시위로 “희망찬 미래로 가는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네라는 실질적 변화를 위한 계획을 일절 제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시위에 나선 칠레인들은 멈추지 않을 기세다.

칠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칠레인 80퍼센트가 피네라의 개혁이 불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10월 17일 지하철 요금 인상에 맞서 시위가 분출하자, 피네라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러나 항쟁이 커지면서 피네라 정부는 요금 인상 계획을 철회해야 했다.

그러나 시위는 이미 광범한 요구들을 내세우고 있었고, 혹심한 탄압에 직면했다. (▶ 관련 기사 11면)

군경이 시위대에 최루가스를 살포하며 시위를 공격했다. 최소 470명이 총에 맞았고, 칠레 전역에서 시위 참가자 19명이 죽었다.

죽음

그중 다섯 명은 군경의 진압 과정에서 살해됐음이 확실히 밝혀졌다. 부상자 수는 [여지껏 밝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칠레의료인협회 회장 이즈키아 시체스는 이렇게 말했다. “부상자 수가 터무니없이 적게 집계됐습니다. 피해자들은 기본권 침해 사실을 신고할 마땅한 수단조차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체스는 [정부가] 부상자 수를 [은폐하지 말고] 전부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0월 29일 유엔 인권조사단이 칠레를 방문해 폭력적 시위 진압에 관해 조사할 예정이다.

칠레의 혁명적 사회주의자[이고 1970년대 초 칠레의 혁명적 시기를 몸소 체험했던] 마리오 나인은 10월 26일 런던에서 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 칠레에서는 봉기라고 부

를 만한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압도 다수 대중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자, 대통령 세바스티안 피네라는 탱크와 군대를 거리에 풀어 엘리트의 특권을 수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운동은 교통비 인상 반대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연금 생활자들이 받는 연금은 월 7만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져 먹을 것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필품 물가는 천문학적 수준으로 치솟았고 그 결과 사람들은 빛의 수렁에 빠져 듭니다.

“두 달 전에 칠레에서는 교사들과 슈퍼마켓 노동자들이 대규모 파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 파업이 이번 항쟁을 [직접] 촉발시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청년들이 지하철 요금 인상에 맞서 투쟁하면서 항쟁의 불을 지폈습니다.

“칠레에는 변화의 희망이 가득합니다만, 그 희망을 최대로 실현하려면 혁명적 조직이 필요합니다. 기성 좌파 조직을 믿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특정 정치인 한 명을 반대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자본주의 국가 체제 자체에 도전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678호 / 번역 김준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남미 좌파를 위한 쿠바 혁명의 교훈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

칠레와 에콰도르에서 일어난 폭발적인 반란으로 라틴아메리카가 다시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이 반란들은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계속해서 엄청난 대중저항을 불러일으키는지 보여 준다.

이것은 10월 26일 〈인테내셔널 소셜리즘〉 저널이 주최한 라틴아메리카에 관한 행사의 주제 중 하나였다. 이 행사에서는 이전의 반란들이 어떻게 라틴아메리카에서 좌파 정부, 특히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와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가 각각 정권을 잡은 소위 “핑크 타이드[파도]”를 일으켰는지도 분석했다.

하지만 핑크 타이드는 약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브라질에서 이를 확연하게 볼 수 있다. 브라질에서는 2002년 노동자당이 집권했지만, 2016년 합헌 쿠데타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해

임되고 전임자 룰라가 투옥됐다. 이후 극우 선동가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연사들은 이러한 좌절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갔다. 앤디 브라운은 좌파 정부 중 어느 곳도 자본주의와의 진정한 단절을 추구하지 않았고, 그래서 대중의 환멸을 불러일으키는 우파의 반동에 취약했다고 주장했다. 클라우디아 페레스 파리아는 보우소나루의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은 새로운 “고삐 풀린 악랄 자본주의”로 나아가 환경을 파괴하며 천연자원을 약탈하기 위한 것이고 그 앞에 놓인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마리오 나인이 지적했듯이, 라틴아메리카에서 좌파에게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끼친 모델은 1958~1959년 쿠바 혁명이다. 그런 점에서 프랑크 가르시아 에르난데스가 콘퍼런스에서 연설한 것은 매우 행운이었다.

프랑크는 올해 초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레온 트로츠키에 관해 역사에

남을 만한 학회를 조직한 쿠바의 사회학자, 역사가다. 쿠바 정권이 소련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트로츠키는 쿠바에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프랑크는 쿠바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재평가를 선도하고 있다.

프랑크는 경제 개방 시도의 결과로 쿠바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얘기했다. 버락 오바마는 미국 대통령이였을 당시에 쿠바와 화해 정책을 추진했다. 쿠바는 그 이전까지는 혁명 아주 초기부터 [60년 가까이] 미국의 경제 봉쇄를 받아왔다.

프랑크는 경제 개방으로 특히야바나의 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부르주아 계급이 경제뿐 아니라 문화와 이념적으로도 발전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쿠바에서는 계급투쟁이 새로운 형태로 재등장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쿠바 경제를 봉쇄하려 함으로써 이과정을 늦추고 있다.

나는 프랑크와 대화를 나눴다. 나는 피델 카스트로와 그의 7·26 운동(M-26-7) 동지들이 플렌시오 바티스

타의 잔혹한 독재정권에 맞서 무장 투쟁을 벌이는 데서 보여 준 영웅적 행동을 아주 높이 샀다. 나는 스티브 쿠션이 쓴 《쿠바 혁명의 숨겨진 역사》에서 나온 새 연구 결과도 얘기했다. 그 연구는 무엇보다도 쿠바 혁명에서 조직 노동자들이 중요한 구실(특히 카스트로가 요청한 1959년 1월 1일 총파업)을 했고, 이것이 혁명의 승리를 굳히는 구실을 했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나는 쿠션의 발견이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창립자인 토니 클리프가 쿠바 혁명 직후인 1960년에 한 주장이 틀렸음을 입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클리프는 쿠바 혁명이 소위 “빛나간 연속혁명”의 사례라고 주장했다.

연속혁명 이론을 처음 공식화한 것은 트로츠키였다. 트로츠키는 자본주의가 세계 체제이고 어느 나라도 자본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봤다. 그래서 노동계급이 이끄는 투쟁은 기초적인 민주적 권리를 위한 투쟁이더라도 사회주의 방향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

다. 클리프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노동계급이 투쟁을 이끌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중간계급 중 급진적 민족주의 부문이 권력을 쟁취하고 제국주의와 단절할 수 있지만, 자본주의와는 단절하지 않는다.

이것이 쿠바에서 벌어진 일이다. 노동자들은 혁명을 지지했지만, 1959년에 권력을 잡은 것은 7·26 운동의 혁명적 민족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이후 스탈린주의 공산당과 통합됐다. 쿠바 혁명의 가장 영웅적인 인물인 체 게바라는 1960년대 초 산업부 장관으로서 중앙집중적인 국가자본주의 경제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 주장이 옳다면 쿠바 혁명에서 분명 영감을 얻을 순 있지만 그것을 모범으로 삼을 수는 없다. 프랑크는 동의한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논의했던 주제들은 거대한 희망과 두려움으로 고군분투하는 라틴아메리카 좌파에게 중요하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678호 / 번역 김동욱



“우리의 분노는 수십 페소가 아니라 수십 년 고통 때문이다”

출처: Reuters